[UCI]I804:24011-200000237732

2009年 2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연구

- 한국 근대사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尹 洙 日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연구

- 한국 근대사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2009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尹 洙 日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연구

指導敎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8 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尹　　洙　　日

尹洙日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副敎授　金　熙　照　印

2008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 i
Ⅰ. 서 론 ·····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 3
Ⅱ. 본 론 ····· 7
1. 일본 역사교육의 구성 체제 ····· 7
1.1 일본 역사교육의 목표 ····· 7
1.2 중학교 역사교육의 목표 ····· 8
2. 일본 역사교과서의 구성 체계 ····· 10
2.1 교과서 검정 제도 및 채택 ····· 10
2.2 일본 교과서에서의 한국사 인식의 배경 ····· 13
2.3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 15
3.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 분석 ····· 17
3.1 정한론 ····· 17
3.2 강화도 조약과 개항 ····· 25
3.3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전쟁 ····· 28
3.4 주권침탈과 저항운동 ····· 32
3.5 일본의 식민지 정책 ····· 38
3.6 3·1 운동 ····· 42
3.7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 48
3.8 일제의 황민화 정책 ····· 53
3.9 강제징용·징병·종군위안부 ····· 56
4. 교과서 서술에서 나타난 알아본 한국 상 ····· 61
5. 한·일 교과서 논쟁 ····· 61
5.1 한국정부의 수정요구안과 일본 문부성 답변 분석 ····· 61
Ⅲ. 결론 ····· 72
참고문헌 ····· 77

-표 목차-

<표 1> 분석대상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 3

<표 2> 분석대상 역사교과서 채택률 ····· 4

<표 3> 정한론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17

<표 4>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23

<표 5>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26

<표 6> 주권침탈과 저항운동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30

<표 7>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35

<표 8> 3·1 운동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39

<표 9> 관동대지진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44

<표 10> 황민화 정책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내용 ····· 49

<표 11> 강제징용·징병·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 52

<표 12>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안과 문부과학성 검토 결과 비교(후소샤) ····· 64

<표 13>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안과 문부과학성 검토 결과 비교(7종) ····· 68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Textbooks in Japanese Middle Schools
- Centering on Descriptions Relating to Modern Korean History -

Su-Il Yoon
Advisor : Prof. In-Hyun Kim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issue of Japanese textbook has caused much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for such a long time. Since it became an international issue in 1980s, we has asked Japan to make re-adjustments because these educational materials have distorted and hid the facts, but no definite results have been achieved and rather the emergence of new edition of history textbooks published by Fusosha became an incentive to a new problem. A textbook is a mirror that speaks for one's country. That is, it is a book for education. Above all, a history textbook is an index to show the historical view of the people and their racial characteristics.

So, as history education for young peopl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future generations who will lead the country, it is self-evident that pre-modern and anachronic description of the facts as in Japanese textbooks will have a harmful influence on the thoughts of future generation who should have future-oriented though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bjectives of history

education through Japanese teaching methods, focusing on history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s,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entering on description of modern history, examine the views of Japanese people on history and Korea and Korean history. Based on the results collected, this study is to present suggestions on future description of history textboo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objectives of Japanese history education focus on faithful ethic education and adjustment to globalism. The Japanese history education is oriented to development of identity as a Japanese and global disposition. It is assumed that the 『new edition of history textbooks』 reflects the desire to raise patriotism of Japanese people in spite of its low circulation rate. It seems that new teaching methods reflect the current right-wing trends in Japan. Description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re also being targeted under such objectives and movements which indicate a gradual regression to Japanese imperialism may occur. Second, this study identifies the background of recognition of Korean history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e background has a very long history. From the start, Japan has not recognized Korean history well, as it justified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lonization. Though many who insisted the emperor-oriented nationalism and benefits of colonization disappeared and such historical views changed, as far as recognition of Korea as a colony has not disappeared, we always have the origin of conflicts.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part of Korean modern history in Japanese textbooks. All the textbooks accepted that opening agreements such as the Jung-han-ron and Ganghwado Treaty were unequal, but the inaccurate description of the Jung-han-ron, that Korea was responsible

for it, still remain. It seems that much of the Korean resistance such as the 1919 Independence is not mentioned in the 2001 edition. As the massacre of Korean people in the Great Gwanto earthquake was cut down and hidden, it was difficult to find true meaning as a history textbook Some textbooks do not even mention the use of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army.

The textbook reflects the recognition of Korea as a colony as organized in this study, justifies the Japanese status completely and describes its invasion, brutality and atrocities vaguely, making only a minimum description of each.

It may be very difficult for Japanese textbooks to have correct directions on description of facts. Though it seems that the issue of textbooks improving in the 1990s, a 'gathering for new history textbooks' emerged, which made the situation worse. It reflects the Japanese position and its intention to describe history correctly is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ough there was a superficial reflection of the past.

Though Japan should be our partner in the global community like other countries, it is running counter to the current trend and its right-wing nationalism is threatening us. It is thought that it is a long way to go for Japan to have very honest and reasonable recognition of the pas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주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쓴다. 이제 이 말은 너무나 식상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이 말의 뜻을 풀어보자면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서로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 발전했다는 배경에 있어서 가깝다는 나라라 불리워지는 것이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생겨난 불행하고도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먼 나라라고 불리우는게 아닐까 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관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바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일본의 사죄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남아 있고 또한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미묘하면서도 특별하기에 최근에 불거진 독도문제와 본 논문이 다루려는 교과서의 제 문제가 차분해지는 것 같던 민족의 감정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1982년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문제가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국제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확대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내용에 관한 분석은 많이 있어왔으며 그에 대한 시정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자신들의 한국 식민지지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과장과 축소 또는 은폐 등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다.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내용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진다면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이 긍정적 일리는 만무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과서는 후 세대들에게 가르쳐지는 그야말

로 살아있는 교육의 매개체로서 그 내용이 후 세대들에게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교과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제도와 내용은 한 나라의 시대정신과 역사관, 정부와 국민의 가치관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일본 역사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는 일은 결국 그 속에 반영된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동시에 파악하는 일 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한국사 연구의 수준과 집필자의 한국관, 나아가서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역사교육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의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역사교과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제사회의 이해와 상호존중을 통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 역사교육과 그 서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러한 교과서의 내용의 과장, 축소, 은폐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역사의식 형성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창시절 역사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웃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자국과의 관계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교과서의 경우, 한국사와 한일관계사의 서술이 후 세대의 국민의식 형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왜곡문제는 단순한 대내외적 문제가 아니라 상호 관련된 양국사이에 과거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던 갖가지 이해관계 이상으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시각에서 현행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그중에서도 한국관련 내용을 검토하되,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과 시각을 관찰하여 향후 역사교과서의 나아갈 방향과 일단의 개선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한국사 그 중에서도 근대사의 서술은 중학교 일본 역사교과서의 전 기술에 있어 극히 일부분을 이루지만 그 분량은 결코 적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그 중에서 7종을 선택하였고 추가로 2001년 검정을 마친 후소샤 교과서를 넣어 총 8종의 중학교 역사 관련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1996년 검정판과 2001년 검정판의 서술 내용을 동시에 비교 대조함으로 내용 분석과 동시에 서술 내용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출판사	서명 및 검정년도
1	日本書籍	『중학사회 역사적 분야』(1996년 검정) 『우리들의 중학사회 : 역사적 분야』(2001년 검정)
2	大版書籍	『중학사회 역사적 분야』(1996년 검정) 『중학사회 역사적 분야』(2001년 검정)
3	教育出版社	『중학사회역사 미래를 응시하며』(1996년 검정) 『중학사회역사 미래를 응시하며』(2001년 검정)
4	帝国書院	『사회과 중학생의 역사 일본의 흐름과 세계의 움직임(초정판)』(1996년 검정) 『사회과 중학생의 역사 일본의 흐름과 세계의 움직임(최신판)』(2001년 검정)
5	東京書籍	『신편 새로운 사회 역사』(1996년 검정) 『새로운 사회 역사』(2001년 검정)
6	日本文教出版社	『중학생의 사회과 역사 일본의 움직임과 세계』(1996년 검정) 『중학생의 사회과 역사 일본의 움직임과 세계』(2001년 검정)
7	清水書院	『일본의 역사와 세계 중학교 역사』(1996년 검정) 『신 중학교 사회과 역사 일본의 움직임과 세계』(2001년 검정)
8	扶桑社	『새로운 역사교과서』(2001년 검정)

분석대상으로 삼은 8종의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다음과 같다.[1] 후소샤판은 2002년부터 발행되었으며 그 채택률은 극히 미비(2005년 현재 채택률 0.4%)하지만 검정과정 시 국제적 파동을 야기했기 때문에 7종에 추가로 넣었음을 밝혀둔다.

<표 2> 분석대상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률

출판사	1997년	2002년
東京書籍	41.1%	51.3%
大阪書籍	19.3%	14.0%
帝國書院	1.9%	10.9%
教育出版社	17.8%	13.0%
日本書籍	12.9%	5.9%
清水書院	3.4%	2.5%
日本文教出版社	3.5%	2.3%
扶桑社	-	0.039%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는 일본은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한국은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육에서는 8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소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사회과 안에서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 국사교육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 도서 편찬위원회가 편찬한 1종도서 한 권을 국사교과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서술 중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 아시아평화와 교육연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역사비평사, 2002,p.15.

주제는 근대 한.일 관계 서술과 한국의 개항과 관련한 근대화 서술 부분, 마지막으로 일제 강점기 서술로서 해방 직전의 문제까지 다루었다. 이 주제들은 가장 민감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일본 보수우익세력과 문부성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부분이기에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현저하게 양국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차이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가진 역사인식의 현주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001년판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바 추가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론의 끝에서는 한·일 역사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 있었던 우리 정부의 수정요구안과 일본 문부성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 다룬 근대사 부분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견해차를 검토해보았다.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분석 대상이 된 교과서가 가장 최근에 새롭게 사용되게 된 2005년도 교과서가 아니라 2002년에 발행된 교과서이며 8종 교과서의 번역 자료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CR 2002-35)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검정을 거친 교과서 8종(후소샤 교과서 포함)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8종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고대부터 근대까지 전 역사를 통틀어 검토하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근대사 관련 부분만을 분석하였다는 점도 제한점으로 남는다. 분석대상 일본 교과서가 8종인데 반하여 우리는 오직 국정 교과서 1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의 교과서를 비교하는 데에 내용과 분량 상 어려운 점이 있어 중학교 국사 외에 고등학교 국사와 고등학교 근·현대사를 아울러 참고하여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교과서 내용 분석에 있어서의 특징은 본 논문이 한·일 교과서에 대한 대조 분석이 아니고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근대사 관련 부분 서술의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가진 역사 인식의 차이와 일본 교과서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고 국정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내용 상 간략히 언급하였다.

Ⅱ. 본 론

1. 일본 역사교육의 구성 체제

1.1. 일본 역사교육의 목표

일본의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역사교육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는 신 학습지도요령의 각 교과 목표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학습지도 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과목표가 원칙적으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부성은 1989년 3월15일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즉 "학습지도요령"을 대폭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992년과 1993년 1학기부터 전 학년이, 그리고 고등학교는 1994년 1학기부터 입학 년차에 따라 차례로 신 학습지도요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그것은 1989년 이래 거의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1998년 7월29일 발표되었다. 그것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학교, 농 학교 및 양호학교의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에 대하여> 라는 답신에서는 개정의 기본 목표로 다음 4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1) 풍부한 인간성이나 사회성,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육성하는 것(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지메(집단 괴롭힘) 문제 등의 심각화, 도시화나 소자(少子)화 등에 따른 사회체험이나 자연체험의 감소, 국제화의 진전 등에 대응)

(2)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변화가 격심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체험적 학습, 문제해결 적 학습, 조사방법과 배우는 방법의 육성을 꾀하는 학습 강조)

(3)여유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기초·기본의 확실한 정착을 꾀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완전 학교

주5일제와 생애학습의 진전에 대한 대응, 학생의 흥미 관심을 살리고 주체적인 학습의 충실을 꾀하며, 선택 능력의 육성과 선택 폭의 확대)

(4)각 학교가 창의 궁리를 하여 특색이 있는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할 것(지역, 학교, 학생의 실태 등의 고려, 교육과정은 대강만을 제시하고 운용의 탄력화를 꾀함)[2)]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일본의 역사교육의 특징 중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도덕교육의 충실과 국제화에 대한 대응이다. 도덕교육의 충실을 기한다고 함은 일본의 문화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태도이며 국제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나 관습을 가진 사람들과 편견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함께 공존하는 자질이나 능력의 육성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역사교육의 지향점을 종합해 본다면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국사와 타 국사를 인식하되,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국제사회 속에서의 일본인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중학교 역사교육의 목표

중학교 역사 교육의 목표 또한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중학교 사회과 전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넓은 시야에 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 하여 공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양을 기르고,

2) 권오현,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후소샤판 공민교과서의 분석: 국가주의적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2001), p.3-4.
3) 권오현 前揭論文.p.3-4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른다[4]

이전 1988년판의 학습지도요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이라는 대목이다. 이것은 사회과의 기본 방침으로서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육성하는 것을 중시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본 논문이 다루려고 하는 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을 다루기 위해선 먼저 중학교 사회과의 역사적 분야의 목표를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 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1) 역사적 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 역사의 큰 흐름과 각 시대의 특색을 세계 역사를 배경으로 이해시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특색을 넓은 시야에서 생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해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

(2) 국가·사회 및 문화의 발전이나 사람들의 생활 향상에 진력한 **역사상의 인물과 현재에 전하는 문화유산을 그 시대나 지역과 관련하여 이해하게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역사에 보이는 국제관계나 문화 교류의 대강을 이해시키고 우리나라와 여러 외국의 역사나 문화가 상호간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 타민족의 문화, 생활 등에 관심을 갖게 해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4) 신변 지역의 역사나 구체적인 사상의 학습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역사적 사상을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5]

---

4) 文部省, 中學校學習指導要領付學校教育法施行規則(抄)』 (大藏省印刷局:1989), pp23, 정재정, 『일본역사교육의 현황과 전망』(한국역사연구회,1992),p.165에서 재인용.

5) 권오현, 前揭論文,p.9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이전과 큰 차이는 별로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계적 관점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화 ·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학생들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역사에 대한 애정”은 애국심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며 , “역사상의 인물과 현재에 전해지는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활동을 통해 자국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한다고 보여 진다. 또한 세계사를 별개로 보지 않고 일본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세계사를 하나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자국사 즉 일본사 중심의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의 가장 큰 목적이 애국심을 키우는 것이 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채택률은 매우 낮았으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로서 정식채택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위시하여 불고 있는 우경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목표와 움직임 아래 일본교과서의 구성은 근·현대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만행과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역사교과서의 구성 체계

2.1. 교과서 검정 제도 및 채택

일본에서 교과서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근대적 소학교학제가 실시된 1872년부터였다. 그 후 1880년에 정부가 교과서로서 부적합한 금지서적을 지정했지만 당시에는 자유발행, 자유채택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를 문부성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1882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

나 1883~1885년에는 교과서의 채택에 임하여 하나하나 문부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후 1886~1902년에는 교과서 발행이 검정제도로 바뀌었다.

교과서 검정이란 신청이 있는 도서가 학교 기본법 및 학교 교육법 취지에 합당하고 교과서로서 적절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것에 의해 교과서라고 하는 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일을 말하며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 자문하고 그 답신에 기초해서 문부대신이 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는 검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민간에서 제작 편집되어진 도서의 내용을 국가가 검정하고 이것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부성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규제의 구체적 수단은 검정이고, 교과서의 검정은 문부과학성 고시인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이루어짐은 앞의 내용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 검정제도는 194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창의성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민간출판사에 교과서 편찬을 위임하고 편향성을 규제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에 검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취지가 오히려 역으로 편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인데다 문부과학성이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이상 실제로는 우리와 같은 국정교과서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즉 국가와 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검정제도라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며 양질의 교과서를 발행하게 하는 제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와는 매우 동떨어져있어 보인다.

교과서의 검정절차는 1989년 4월에 일부 개정되어 199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었다. 신 검정 규칙에 의하면, 신청도서는 먼저 誤記 · 誤植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심의회에서 제기하는 검정의견에 따라 내용과 표현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심의회는 그 결과를 다시 심사하여 합격 · 불합격을 결정한다. 심의회는 검정과정의 개요를 공개한다.

검정의 기준은 문부성이 고시한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과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 의해 정해지는데, 신 검정규칙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준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소학교 사회과 역사적 분야의 교과서는 6 ~7종, 중학교는 13 ~ 15종, 고등학교의 일본사와 세계사는 20여종이 발행되고 있다. 공통된 학습지도요령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각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은 비슷한 점이 많다. 아주 제한적이지만 나름의 특색을 가진 교과서도 있다. 특색 있는 교과서들은 검정과정에서 일부 시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앞서 신 검정규칙은 학습지도요령의 준수를 큰 비중으로 둔다고 하였다. 이는 더 나아가 국가의 의도를 더더욱 교과서에 반영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의도가 교과서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제도의 목적이 있는 그대로의 기술이 아닌 은폐와 축소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사정이 그러하며 그것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말하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각 都・道・부・현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자문기관이 되어 20명 이내의 교과용도서 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교장・교원・교육행정가・학식경험자로 구성되며, 교장・교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점하도록 배려한다. 위원회는 채택기준을 작성하고, 시・군・구 단위로 한 교과에 한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한다. 이에 앞서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됨은 물론이다.[6)]

문부성은 교과서의 채택에 앞서 보통 2개월간의 교과서 전시회를 전국의 750여 개 교과서 센터에서 개최한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관람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은 상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과서를 채택한다. 이는 특정 교과서의 시장 점유 현상이라든가 학교와 교사의 개별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같은 국가의 통제 하에 실시되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은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교과서 소송[7)]과 교과서 내용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비판 등을 통

6) 정재정, " 강화와 개혁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역사교육: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실태" (학술논문, 한국역사연구회, 1996), p.105-106.

7)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교과서 재판은 1997년 8월 3차 소송에서 <수정의견>을 재량권을 이탈한 위법적인 것이라고 선고함으로써 32년의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것은 사법부가 문부성이 실시해 온 교과서 검정에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문부성의 교과서 남

해서 알 수 있다.

2.2. 일본교과서에서의 한국사 인식의 배경

일국의 역사교육의 내용이나 그 나라의 연구는 연구주체의 가치관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한국사에 대한 교육도 연구자의 역사적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 인식의 배경으로는 첫째 皇國史觀 입장의 견지와 거기에 식민지 지배 施惠論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민주의 사관은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된 한국사관으로서 한국민족의 자주정신, 독립정신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식민주의 사관의 주 내용은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선동조론은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것이었으며 정한론의 모토가 되어 일본인의 한국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선동조론을 바탕으로 한국병합을 찬성한 사람은 喜田貞吉이다. 일선동조론은 일제의 한국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고 한민족의 해방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져 사용된 사상으로서 고대로부터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둘은 합쳐야 한다는 어찌 보면 황당무계하고 유치한 논리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한국사의 타율성론은 일제가 한국과 만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滿韓經營의 일환으로서 주창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사는 주체적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서 독자적 존재가 없음 즉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이는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중국의 현 사관과도 일정정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타율성론은 일정 측면에 있어서 일선동조론과 언뜻 대조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제의 한국지배를 정당화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였다.

일선동조론과 타율성론이 전쟁사, 정치사, 역사, 지리 등의 연구를 바탕으

용을 일정정도 방지하는 제어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정, 『일본의 논리』, 현음사, 1998, p.48~49.

로 한 것에 비해 정체성론은 한국의 사회 경제를 바탕으로 한국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제기한 이론이다. 즉, 한국사를 서구나 일본과 같이 정상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도 한국사회가 일본에서 봉건제 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의 역사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8] 물론 서구 열강들과 일본에 비해 근대의 한국은 낙후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남의 도움 없이는 전혀 발전할 수 없고 또 정체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는 한국사 자체적인 내적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무시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식민사학의 논리는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어진다. 즉 그것은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 한국 문화는 독자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가치가 없는 것, 한국은 스스로 설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역사교육을 통하여 후 세대들에게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조금씩 변화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한국사를 한민족의 주체적 발전의 역사로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적어도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 사이에서는 패전전의 皇國史觀的 한국사 인식을 고수하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육에 있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로격의 연구자나 국가권력에서도 皇國史觀的 연구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카다 히로시(四方博)는 1950년대 초에 발표한 논문에서 여전히 한국사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일선동조론은 일제의 패망과 한국의 해방으로 인해 존립의 기반이 저절로 무너졌던 반면에 정체성론은 가시적 타격을 받지 않은 채 대전 전의 學脈을 이루어 존속하였다.

이 역사적 보고서의 식민주의적 한국관은 일본의 집권세력에게 계승되어 역사교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해 교과서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9]

---

8) 정재정, 『일본의 논리』, 현음사, 1998, p.192~193, 송은설, 『일본역사교과서한국사관련내용분석』(교육학석사학위논문,서강대학교,2001), p.12에서 재인용.

이상 일본인의 한국 사상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한국민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거기에 따른 한국민에 대한 멸시, 조롱 등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내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 인식의 배경은 바로 皇國史觀과 일제의 施惠論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침략의 수탈의 역사가 끝난 지 벌써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름대로 좋아지던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皇國史觀과 施惠論을 주창하던 자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일본민족의 민족성의 저변에는 아직도 한국 지배에 대한 로망이 살아 숨 쉬는 듯하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에 갖다 붙이면 옳을 듯하다.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뒤집어 지지 않는 한 이러한 수식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2.3. 일본중학교 교과서에서의 한국관련 서술의 변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신 학습지도요령의 실시와 더불어 큰 폭으로 변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일 관계사에 대한 기술도 또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변했다. 그중에서도 본 논고가 다루려고 하는 근대사 관련 기술이 특히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양적,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면 좋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술 내용에 대한 삭감은 옳지 못하게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 등에 관한 기술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일본 우익의 이른바 "교과서 공격"이 실효를 거둔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분석에서 다루겠지만 가장 채택률이 높은 동경서적의 근대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한론과 개항에 관한 기술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내용 면에서는 신 교과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한론에 대한 전후사정을 설명하

9) 송은설, 前揭論文 ,p.13.

지 않아 정한론과 강화도 조약이라는 하나의 결정과 사건이 조선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기술은 내용 상 축소가 이루어졌다. 동학농민운동과 맞물리는 것이 바로 청일전쟁인데 청일전쟁은 일본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개입의 의지를 최대한 희석시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주권침탈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량이 줄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아쉽게 그 내용이 모두 의병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의병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사라졌으며 일본의 우익들이 의병에 관한 내용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아 신교과서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3·1 운동에 관한 기술이다. 3·1운동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많이 삭제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한 지도나 사진들을 빼버렸다. 내용상으로 보다는 의도적으로 설명 자료를 축소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다섯째 관동대지진에 관한 기술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삭제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사진이나 자료도 많이 빼버린 느낌이다. 일본의 잔학성을 가장 드러내는 부분이라 여겨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축소해버린 느낌이다.

여섯째 황민화 정책과 독립운동에 관한 기술이다. 항쟁과 투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버려 황민화 정책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을 애매하게 기술함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다.

일곱째 강제징용·징병에 관한 기술이다. 우선적으로 분량 면에서 대단히 축소되었다. 강제연행의 부당성이나 처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졌다. 특히 동경서적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완전 사라진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상과 같이 동경서적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술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한일관계사에 대한 서술방향은 일본 우익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용 분석을 앞두고 개략적인 서술 변화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본의 역사 교육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이다.

3.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근대사 관련 서술 분석

3.1. 정한론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인식이 근대 이전, 즉 도쿠가와 막부 후기부터 싹트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를 들면, 막부말기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명치정부의 지도자 키토 타카요시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었던 요시다 쇼인(1830~1859)은 옥중서간을 통해 국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를 분할함으로써 러시아, 미국에게 잃은 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구미굴종, 아시아 침략론을 주장하였던 것이다.[10] 이러한 의식은 개항과 일제의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침략과 식민주의로 대표되는 일본역사의식의 초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한론으로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의 중심에 정한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명치정부는 조선에 국서를 보내 신정부 수립을 알리고 국교를 요구하였는데 조선에 의해 거절당하였으며 이 시기에 조선과 전쟁해야한다는 여론이 일본에 퍼졌다.

1871년 7월에 단행된 廢藩治縣을 계기로 명치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이루게 되고 이전까지는 쓰시마번을 통해 조선과 교섭해 오던 것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던 일본에서는 1872년 징병령이 실시되고, 재정 면에서는 사족에게 지급되던 가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반대에 부딪쳐 실시를 연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족들의 불만이 팽배, 반란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닥친 상황을 두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정한론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미지역으로 파견되어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이와쿠라 사절단은 내치우선을 내세워 정한론에 반대하였다. 격론 끝에 정한파의 패배로 정한론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맺게 되었고 이 정치싸움으로 결국 명치정부는 분열되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정한론은 한국에서의 왜곡 시정 요구에 매번 포함

---

10) 박양신 「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조선침략의 성격; 제국주의의 조선침략과정과 그 성격」 『역사비평』3, 역사비평사, 1988, p.87.

되는 부분으로서 용어상의 문제, 정확한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하게 자국 측에 유리하게 기술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표-3> 정한론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검정년도	정한론의 내용
日本書籍	1996년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와 이타카키 다이스케(板壇退助)은 군대를 보내 조선을 공격하고자 했다.(征韓論) 마침 구미로부터 돌아온 오쿠보(大久)등이 국내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억눌렀으므로 사이고 등은 정부를 떠났다.(186쪽 11-13행)
	2001년	한편 조선에 대해서는 1873년 군대를 보내어 공격하려는 주장이 나타났다. (征韓論)(129쪽18-22행)
大阪書籍	1996년	국교가 끊겨져 있던 조선에 대해 사이고다카모리(西鄕隆盛)측은 신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족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또한 무력으로라도 일본과 국교를 맺게 하려고 征韓論을 주장하였습니다.(186쪽)
	2001년	쇄국을 하고 있던 조선에 대하여,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등은 신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족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어, 무력에 호소해서라도 일본과 국교를 맺도록 하자며, 征韓論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 시찰에서 귀국한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오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등)에게 국력의 충실이 먼저라며 반대에 부딪쳐, 사이고 등은 정부에서 물러났다. (118쪽)
教育出版	1996년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던 조선에 대해 일본은 구미 여러 나라에 앞서 개국할 것을 강하게 종용했다. 조선이 이를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카케다이스케(板壇退助)를 중심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조선을 개국시키자는 주장(征韓論)이 높아졌다.(191쪽)
	2001년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어, 메이지 신정부와의 국교에 응하지 않는 조선에 대해, 일본은 강한 자세로 국교회복을 강요했다. 조선이 이것을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일본정부 내에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이타가키 다이스케(板壇退助)등을 중심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요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주장(征韓論)이 일어났다. 그러나 1873년, 구미 시찰에서 귀국한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키토 다카요시(木戶孝允)등은 국내를 개혁하고 국력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146쪽), 이것에 반대하였다. 사이고・이타가키 등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를 떠났다.(147쪽)
日本文教出版社 (1996)	1996년	정부는 조선에도 국교를 틀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일본의 강압적인 태도를 불만스러워 해 거부하였다. 정부 내에서는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조선을 개국시키고자 하는 征韓論이 일어났다. 귀국한 이와쿠라와 오쿠보는 국내의 정치를 정비하고 국력을 다지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대했던 사이고다카모리(西鄕隆盛와) 이타카케다이스케(板壇退助)등은 사직하고 정부를 떠났다.(186쪽)

	2001년	정부는 조선에도 국교를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응하지 않고, 국내에서는 征韓論이 일어났다. 구미를 보고 온 岩倉具視와 大久保利通이 국내의 개혁이 먼저라고 하며 이를 누르자 西鄕隆盛과 板壇退助등은 정부를 떠났다. (140쪽)
帝國書院	1996년	사이고다카모리(西鄕隆盛)와 정부 내부에서는 조선과의 국교를 진척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쇄국정책을 하고 있었던 조선이 거부하였으므로 무력으로라도 개국시키고자 하는 征韓論이 드높았다. 이것에 반대하고 1873년에 귀국한 이와쿠라 와 오쿠보등은 국내정비가 우선이라며 정한론을 막았다. 그로 인해 정부 내부에서 대립이 일어나 사이고다카모리(西鄕隆盛), 이타가키다이스케(板壇退助), 에토신뻬이(江藤新平)등은 사직하고 정부를 떠났다.(193쪽)
	2001년	신정부는 조선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조선은 종래의 관계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나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壇退助)등은 무력으로 조선에 자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征韓論을 주장하였지만,1873년에 귀국한 이와쿠라・오오쿠보 등은 국내의 정비가 먼저라고 하여 征韓論을 억눌렀다. 그 때문에, 사이고・ 이타가키 등은 정부를 떠났다.(157쪽)
東京書籍	1996년	조선은 구미에 대해서 쇄국하였고 또한 신정부와 국교 맺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정부 내에서는 무력으로 개국을 종용하자는 주장이 높아져 (정한론) 1873년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구미를 시찰하고 귀국한 이와쿠라토모미(岩倉具視)와 오쿠보(大久保)는 국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여 파견을 중지하였다.(201쪽)
	2001년	청과는 1871년에 대등한 입장에서의 조역(日淸修好條規)을 맺었지만, 중국에 조공하고 있던 조선은 구미에 대해 쇄국하고, 일본과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무력으로 개국을 시키려는 주장(征韓論) 높아져, 일단 사절 파견이 결정되었으나, 구미에서 귀국한 이와쿠라와 오오쿠보는 국력의 충실이 먼저라고 하여 파견을 중지시켰습니다.(133쪽)
淸水書院	1996년	국교를 유지해왔던 조선에서는 왕정복고를 알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이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거절하자 사족 중에는 정한론을 주장하는 기운이 높았다. 그들은 조선을 비난하고 그것을 실로 전쟁을 일으켜 조선으로 출병하여 징병제등의 개혁을 통해 위협받고 있던 사족의 지위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이고다카모리(西鄕隆盛)와 이타가키다이스케(板壇退助)가 征韓論을 대표하였다. 그러나 구미에서 돌아온 이와쿠라, 오쿠보, 키도 등은 현재의 국력으로 정한론은 위험하니 국내의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사이고 와 이타가키 등은 사직하였으며 군인의 일부도 이를 따랐다.(194쪽)
	2001년	한편, 정부는 이웃이 된 아시아의 국가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가지려 하였다. 먼저 1871년에 청과 대등한 조약을 맺어 정식 국교를 열었다. 또한, 국교가 유지되어온 조선에게는 왕정복고를 알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관계 변화를 거부하자, 사족 중에는 주선을 책망하는 것을 구실로 전쟁을 일으켜 조선에 출병하고 힘으로 개국시키려고 하는 정한론이 높아졌다. 징병령 등의 개혁으로 위협받고 있던 사족의 지위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정한론은 정부에서는 사이고다카모리(西鄕隆盛)와 이타가키다이스케(板垣退助)가 대표하였다. 그러나 구미로부터 돌아온 이와쿠라(岩倉)·오오쿠보토시미치(大久保利通)·키도다카요시(木戶孝允) 등은 지금의 국력으로는 征韓論은 위험하며, 국내 체제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139쪽)
扶桑社	2001년	그러나 국내에서는 1873년 일본이 개국의 권유를 거절해왔던 조선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해서 무사들 사이에서 무력을 바탕으로 조선을 개국시키자는 征韓論이 터져 나왔다. 번제도의 폐지로 실업자가 된 무사들은 징병령이 시행되어서 무사의 긍지가 손상되었다고 하는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조선과의 전쟁으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절단의 부재로 책임을 위임받았던 사이고다카모리였다. 사이고는 정부에 있어 근대국가를 만든 개혁을 진행해 가면서도 무사들의 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사이고는 자신이 사절로서 조선에 가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壇退助), 에토신베이(江藤新平)등 다른 참의도 그것에 동의해,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다. 사이고 자신은 전쟁을 각오한 교섭으로 조선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202-203쪽)

우리나라의 국정 교과서인 중, 고등학교 국사책에는 정한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없다. 아무래도 정한론이 일본 내부에서 이루어진 논의였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11]에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시대적 배경과 일본 정가의 분위기에 대한 간략한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한론의 배경에는 첫째 구미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에서 상실한 것을 아시아 각국에서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과, 둘째로 불평이 많았던 사족들의 반 정부적 기풍을 국외로 도출 발산시키려는 교묘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청수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대상 교과서는 일본정부가 국교를 요구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런 안일한 역사 서술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조선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그들이 보내온 외교문서에 황실. 봉칙. 등의 용어를 써서 마치 상국인 것처럼 자처한 일본의 태도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일본은

11)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7차 교육과정으로 시행된 한국사 교과목이다

대등한 나라로 인정해 온 조선 정부의 입장을 자극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측의 개항거부로 정한론이 일어났다는 안일한 역사서술은 그 후의 침략행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정한론의 발생 원인에 사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오사카서적, 청수서원) 또한 부상사의 정한론에 대한 서술은 가장 많은 동시에 왜곡도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이 쇄국정책을 취하며 일본 명치 정부의 국교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서적의 내용을 보면 정한론이라는 자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등장했다고 기술 되어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면 서세동점의 시기에 노출되어 두 번의 양요를 겪으면서 국가 존립에 대한 위기감과 더불어 흥선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맞물려 외세의 침입과 개국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계를 갖춘 일본이 통상수교를 요구했던 것이다.[12] 조선이 일본의 수교 요구를 거절했던 이유는 일본의 명치정부가 종래의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개정하기 위해 조선에 보낸 국서 안에 "황"이라고 하는 자구가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조선과 중국과의 국가적인 관계는 군신관계이고 조선의 왕은 스스로를 낮추어 "왕"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중국의 왕에 대해서는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는 "황"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경서적, 일본서적, 후소샤의 세 교과서는 그러한 상황의 설명을 누락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학생들에게 조선이 통상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침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후 벌어지게 될 사건들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적인 기술로밖에 볼 수 없다.

정한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13] 1863~1864년의 정한론, 왕

---

12)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한편,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갖춘 일본도 통상을 요구해 왔으나, 그 외교 문서에 일본 국왕이 조선 국왕을 낮추어 보는 표현과 종래의 외교 관행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 조선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중학교 국사』, 교학사,2002,p.194.

13) 한일관계사학회,「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2」,자작나무, 1998, pp.157~165.

정복고의 서계 거부를 둘러싼 1870년의 정한론,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하여 일어난 1873년의 정한론 정변이다. 일본의 개국과 새로운 개항자의 설치는 막부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여러 다이묘들에게는 경제적 위기를 느끼게 했다. 따라서 막부중심의 개항정책을 반대하는 이른바 “양이파”가 등장하여 반 막부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새로운 개항장이 성장함에 따라, 조선과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취해온 대마도주의 경제는 어려워졌다. 여기에 러시아 함대 포사드닉 호가 대마도에 들어와 개항을 요구하자 대마도주는 안정된 지행(토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항을 전제로 대마도를 막부 직할로 하고 자신들에게 규슈에 있는 막부 토지 10만석을 달라는 “이봉운동”을 1861년 전개하였으나 다음해 막부 세력 약화로 실패하였다. 대신 새로이 성장하는 양이세력과 동맹을 통하여 대마도의 자립을 추구하게 되었다. 대마도측은 점차 성장하는 일본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지금까지 조선에 의지하여 식량을 얻어먹은 것은 일본의 수치라고 주장하고, 대마도주의 자립을 요구하는 원조요구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강조하면서 조선을 비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반 막부 양이파에 속한 일본인들은 막부와 조선간의 평화교린 외교관계를 치욕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제까지의 조선에 대한 열등감이 오히려 조선에 대한 우월감으로 표출되면서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 기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일본의 국위를 빛낸 쾌거였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며 조선에 대한 부당한 적개심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것이 1863년의 정한론이다.

명치정부가 성립한 후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를 조선에 보냈으나 거절당한 뒤 일어난 1870년의 정한론도 계획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마도주가 이러한 서계를 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명치 정부 내 조슈파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즉 명치 정부 내의 조슈파는 조선 측의 거절을 끌어내 이를 바탕으로 전쟁의 위기를 만들고, 이 위기를 이용하여 친병을 만들어, 번벌정부를 중앙집권화 하여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것이다. 대마도주의 입장에서도 조선이 이 서한에 분노하여 철공철시를 단행하고 자신

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대마도가 기아에 빠질 것이므로, 원조요구의 근거가 되어 숙원이었던 안정된 지행을 확보할 것이라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 측은 서계의 내용을 수정해오도록 설득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훈도 안동준은 동래부사와 협의하여 옛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서계를 고쳐와야만 한다는 뜻을 동래부사의 서한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 이 서한은 조선 측이 정식으로 왕정복고의 통지를 거부하였다는 공식 서한으로 일본 측에 받아들여져 정한론의 분위기를 만들고 1870년 4월부터 조선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의 조야에 널리 퍼졌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쓰마 출신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청나라와 먼저 조약을 맺어두면 전쟁을 일으켜도 임진왜란 때 명군이 원조하듯 청나라가 조선을 원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나라와 조약을 맺는 것이 급선무이고, 일단 조선과의 관계는 조선의 요구대로 서계를 수정하여 화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도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정한론이 등장한 시기는 앞서 언급한 명치정부가 중앙집권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며 사족들의 불평불만을 격화시킨 1873년이다.

이 시점에서 정한론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게 된 데에는 국내사정뿐만 아니라 청국에서 거둔 일정한 외교적 성과와도 관련이 있었다. 청일수호조규의 비준·교환을 위해 청국에 갔던 외무경 소에지마 타네오미는 임무가 끝난 후에도 얼마간 청국에 머물면서 각국 공사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시 미 국방장관 피시는 일본을 이용하여 미국의 극동정책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것을 도모, 청일 양국의 이간을 노리고 있었다. 이 선에 따라 미국공사 로우는, 미국이 1871년 2월 조선의 문호타개를 위해 정치·외교적으로 청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신을 받았던 것을 소에지마에게 건네주었다. 러시아공사 부쵸프도 사할린의 양도까지 제의하면서, 일본이 러시아의 행동을 묵인하기만 한다면 일본의 침략을 묵인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다. 이상과 같이 미・러의 협조와 청국의 불간섭주의를 확인한 위에서 정한론은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한론이 대두된 이유는 교과서의 서술과 같이 조선이 국교 거부로 인한 우발적인 것도 아니며, 조선의 쇄국 정책 때문도 아니다. 정한론의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일본 내부의 권력다툼과 이로 인한 우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이 열강의 아시아 지배 야욕과 만나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한론에 대한 서술은 정한론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서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3.2. 강화도 조약과 개항

<표-4>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1875년 일본은 조선에서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조선에 압력을 가해 일조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구미 여러나라에 의해 강요당했던 것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 강요하였다.(187쪽 1-3행) **주)강화도 사건 :** 조선이 강화도 부근에서 일본군함이 조선 측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조선군에 포격을 당해 일본 측이 이것에 응대했던 사건.
	2001년	그 후 일본은 조선에서 강화도 사건1)을 일으켜 이를 계기로 조선에 압력을 가하고 일본이 구미제국에게 강요당한 것과 동일한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 체결하게 하였다.(日朝修好條規)(129쪽 18-22행) 1) 강화도 사건 : 조선의 강화도 부근에서 측량하는 등 일본의 군함이 조선 측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군의 포격을 받아 일본 측이 이에 응전한 사건
大阪書籍	1996년	1875년 정부가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을 도발함으로써 강화도 포대와 포격전이 일어났습니다.(강화도사건) 이를 구실로 해서 이듬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치외법권등을 포함한 불평등한日韓修好條規를 조선으로 하여금 인정토록 해 부산 등의 세 항을 열어 통상을 시작하였습니다.(186-187쪽)
	2001년	그러나 1875년, 정부는 조선에 군함을 파견하여, 연안을 무단으로 측량하는 등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강화도 포대와의 사이에 포격전이 일어나졌다(강화도사건). 이것을 이유로 다음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치외법권 등을 포함하는 불평등한 日朝修好條規를 조선이 인정하도록 하고, 부산 등의 3항을 개항시키고 무역을 시작하였다.(118쪽)
帝國書院	1996년	1875년 일본은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페리의 행동을 모방해 군함을 이끈

		사절을 보내 조선에 압력을 가하고는 이듬해 日朝修好條規를 체결해 개국토록 했다. 이 조약은 한국에게 매우 불평등한 조약 이었다.또한 조약에서 조선은 독립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은 조선을 속국을 간주하고 말았다. **주) 강화도 사건:** 일본군함이 서울입구에 있는 강화도에 접근하여 측량하였으므로 조선의 포대로부터 포격 당했던 사건. 일본 측은 응전하였고 포대를 파괴하고 점령하였다.(193쪽)
	2001년	1875년에 조선의 강화도 바다에서 무단으로 측량을 하고 있던 일본의 군함이 포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강화도 사건). 이 사건을 구실로 정부는 조선에 불평등조약인 日朝修好條規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157쪽)
教育出版社	1996년	1875년 일본의 군함이 한성 부근의 연안에 침입하여 연습과 측량을 하였으므로 조선으로부터 포격을 받았다.(강화도사건)정부는 이를 구실로 강경한 태도로 교섭하여 이듬해 日韓修好條規라는 조선에 불리한 조약을 강제하여 국교를 열게 했다.(191쪽)
	2001년	1875년의 강화도사건(주1)을 계기로, 일본은 페리의 수법을 흉내내어, 다음 해, 군함을 인솔한 사절을 조선에 보내 압력을 가하고, 日朝修好條規를 체결하여 개국시켰다. 이 조약은 조선에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또한 조약에서는 조선이 독립국으로 되어 있었지만, 청은 조선을 종속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47쪽) 주1)일본 군함이 서울의 강화도에 근접하여 측량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아, 일본 측이 반격하여 포대를 점령한 사건
東京書籍	1996년	1875년에 일어났던 강화도 사건을 기회로 불평등한 조약인 日韓修好條規를 강요하여 조선을 개국시켰다. **주)강화도사건:** 일본의 군함이 시위 행동으로서 한성의 가까이 있는 강화도 근처를 무단 측량 중 조선의 포대로부터 발포당하여 반격했던 사건.(201쪽)
	2001년	그 후 일본은 1875년에 강화도 사건 주2) 을 일으키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 다음해에 日朝修好條規를 맺어 조선을 개국시켰는데, 그 내용은 불평등 조항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133쪽) 주2)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여 연안을 무단으로 측량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무력 충돌.
淸水書院	1996년	일본은 1875년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여 연안을 무단으로 측량하고 압력을 가해 무력충돌을 야기했다.(강화도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듬해 조선에 불리한 조약(日韓修好條規)을 인정토록 해 조선을 개국시켰다.(195쪽)
	2001년	정부는 다음해 정부에 남은 군인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만에 출병하고, 1876년에는 조선에 강경한 태도로 압박하여, 조선에게는 불평등한 日朝修好條規를 강요하였다. (139쪽) 그림 : 조선과의 교섭 1875년, 일본은 조선의 강화도 부근에 측량 명목으로 군함을 보냈습니다. 이 때 교전사건이 있었음을 계기로 조선에 조약교섭을 강제하여, 1876년에 日朝修好條規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 사절이 군대를 이끌고 교섭회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조선국 진경」) (139쪽 좌상단의 그림)
日本文教出版社	1996년	1876년에는 조선을 강경한 태도로 압박해 조선에게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림) 조선과의 교섭 :** 1875년 일본은 강화도 부근에 측량한다

		는 명목으로 군함을 보냈다. 이때 교전 사건이 있었음을 빌미로 조건에 조약교섭을 강요해 1876년에 일한 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186쪽)
	2001년	1875년, 일본 군함이 한성 가까운 연안에서 연습과 측량을 하고 포격을 받자(강화도 사건), 정부는 이를 구실로 강한 태도로써 교섭하여, 다음해 日朝修好條規를 맺고 국교를 재개시켰다. 이 조약은 조선에게는 불평등한 것이었다.(140쪽)
扶桑社	2001년	한편, 이에 앞서 , 일본 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을 하는 등 시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강화도 사건, 1875년)을 계기로, 일본은 재차 조선에 국교 수립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그 결과, 1876(명치 6)년, 日韓修好條規가 체결되었다. 이것은 조선 측에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 오랜 현안이었던 조선과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그림) 강화도사건 (200쪽 위)** 일본은 군함 운양호를 조선 수역에 파견하고, 그 후 일본과 조선은 교전하였다.

강화도 사건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음을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볼 때 알 수가 있다. 이 강화도 사건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였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에는 운양호가 강화도에 접근한 목적을 흐려놓고 측량실시 라든가 시위 행동 등으로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14] 위의 열거된 모든 교과서가 왜 측량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왜 시위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과 도발을 유도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누락시켰다. 또한 일부 교과서의 내용 중에는 단순한 의도의 방문에 대해 조선이 먼저 선제공격을 가하여 반격하거나 응전하였다는 식으로 기술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빌미를 조선이 제공하였다는 식으로 은근히 표현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帝國書院, 日本書籍)또한 단순히 “강화도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침입행위를 약화시켰던 것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국서원의 내용 중에서 “조약에서 조선은 독립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은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고 말았다" 는 내용은 일본이 단

14) 국사 교과서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마련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통상을 강요하기 위하여 운요호 사건(1875)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 통상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서양 열강이 군사력을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방식을 본뜬 것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중학교 국사』, 교학사,2002,p.197.

순하게 조선을 자주의 나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배격하고 청의 간섭을 받음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행할 길을 트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독립국이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 청을 종주국으로 삼았다는 일제 식민사관의 한 표현에 다름이 없다. 또한 후소샤 교과서의 단순 서술은 관련 사실에 대한 축소, 은폐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3.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전쟁

<표-5>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검정년도	동학농민운동(갑오농민전쟁)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1894년 조선에서는 일본과 구미 여러 나라의 진출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동학을 신앙하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농민군은 화승총과 창 등을 손에 들고 외국세력의 축출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각지에서 정부군을 무찌르고 수도(서울)에까지 육박하였다. 정부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 청은 조선에 출병하였다. 그전부터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이 소식을 접하자 바로 조선으로 출병하였다.(206쪽8-14행) 주)동학은 종교의 일종으로 인간의 평등을 주창하며 침략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의 풍습을 깨뜨린 크리스트교(서학)에 반대했다. 그 해의 간지가 갑오이므로 갑오농민전쟁이라 부른다. 또한 동학의 난이라고도 한다. 그림)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은 1895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되었다.
	2001년	1894년에 조선에서는 일본이나 구미제국의 진출과 조선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동학1)을 믿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농민군은 외국세력의 축출과 정치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각지에서 정부군을 물리쳤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국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즉시 조선에 출병하였다. (141쪽 1-7행) 1)1860년대에 생겨난 종교의 일종으로서 기독교에 대항하여 인간의 평등을 제창하였다. 조선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사이에 퍼져갔다.
大阪書籍	1996년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강요한 후 일본 상인은 조선의 쌀과 금을 싸게 사들이고 면제품을 비싸게 강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는 식료품의 부족 등 경제혼란이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조선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무겁게 내렸기 때문에 민중의 생활은 고

		통스러웠습니다. 1894년 동학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은 농민과 결합하여 외국세력의 추방과 경제개혁을 목표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갑오농민전쟁).(202쪽) 주1) 조선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단체로 서학(크리스트교)에 반대 하였습니다. 그림)전봉준은 농민군을 지휘하여 반봉건 반침략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연합군에 패하여 체포되었고 1895년 자신의 뜻을 이어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려는 말을 남기고 처형되었습니다.
	2001년	1894년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농민들과 결합하여, 외국세력의 추방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여 군대를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조선정부가 청에 출병을 요구하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일본도 청과의 조약을 이유로 조선에 출병하였다. 농민군은 외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정치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휴전하고. 조선정부도 일청 양군에게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양군은 들어주지 않았다. 일본은 영국의 지지를 기대하고, 조선으로부터 청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것을 일청전쟁이라고 한다. 전쟁은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으며, 다음해 시모노세키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다.(130-131쪽)
帝國書院	1996년	조선으로 세력을 뻗치고자 했던 일본의 정책은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는 청과 대립하였다. 조선에서는 전제 지배와 외국세력의 진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높아져 1894년 조선남부에서 동학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갑오농민전쟁) 주) 민간신앙을 근간으로 유교와 불교 등을 받아들인 종교. 서학에 반대하여 봉건제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을 말하였다.(204쪽)
	2001년	그 무렵 조선에서는 무거운 세금에 더하여, 흉작과 일본 상인에 의한 매점으로 쌀값이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894년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종교를 신앙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구미제국을 내쫓아버리고, 조선의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정부군을 무찌르고 조선 남부에 세력을 넓혔다.(갑오농민전쟁).(167쪽)
教育出版社	1996년	일본은 조선을 개국시키자 불평등한 조약을 바탕으로 섬유 제품의 수출과 곡물의 수입을 늘렸으며 적극적으로 세력을 뻗치려고 했다. 조선에서는 왕실을 둘러싼 일본과 청의 대립 등으로 정치는 혼란했으며 식량부족으로 사람들은 고통 받고 있었다. 정치개혁과 외국세력의 배제를 요구하며 1894년 5월조선 남부에서 동학이라는 종교단체가 일어서자 대규모농민봉기가 되었다. (갑오농민전쟁) 조선정부가 청에 지원병을 요청하였으므로 일본도 조선으로 출병하자 농민군은 정부군과 화의를 맺었다.(205쪽)
	2001년	조선에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일본은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청과 대립하였다. 조선국내에서는 전제적 지배나 외국세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높아졌으며, 1894년, 남부지역에서 동학을 신앙하는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이 일어났다(갑오농민전쟁). 청이 조선 정부의 요구에 응해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이것에 대항해서 출병하여, 1894년 7월,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근대화에 뒤늦게

		나선 청은 충분한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157쪽)
東京書籍	1996년	일본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조선을 개국시킨 뒤 점차 조선반도로 세력을 뻗어나갔다. 때문에 조선을 세력범위에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던 청과 대립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안에서도 청에 의존하려는 세력과 일본과 손을 잡으려는 세력이 대립하였다. 이 무렵 조선 국내에서는 무거운 세금에 흉작 일본상인에 의한 매점 때문에 계속해서 쌀값이 올랐다. 이로 인해 1894년 동학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 외국인을 몰아내고자 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 정부군을 무찌르고 조선남부로 세력을 넓혔다.(갑오농민전쟁)그림)조선을 둘러싸 국제관계를 그린 풍자화: 비고의 풍자화 주)동학이란 서학에 반대하여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 민중 속에서 발생한 종교이다.(214쪽)
	2001년	조선에서는 일·청 두 나라의 대립 속에서 정치와 경제가 혼란했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의 추방과 외국인 배척을 목표로 삼아 1894년에 민간신앙을 근거로 한 종교(東學)를 신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이 조선 남부 일대에서 봉기하였습니다(갑오농민전쟁) 이를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140쪽)
淸水書院	1996년	일청양국의 대립 속에서 조선의 정치화 경제는 혼란스러웠다. 그로 인해 1894년 부패한 관리의 추방과 외국인의 배척을 목표로 서양의 종교에 대항하고자 하는 종교(동학)를 신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이 조선 남부 일대에서 봉기하였다.(갑오농민전쟁) (210쪽)
	2001년	1894년, 조선 남부에서 동학 주1)을 믿는 농민의 대반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청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청의 출병을 안 일본은 스스로 군대를 보내, 청국 군과 개전하였다. 주1) : 서학(구미문화)의 확산에 반발하여 급속히 높아진 조선의 민족적 종교를 도학이라고 하였다.(151쪽)
日本文教出版社	1996년	일청양국의 조선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졌고 쌀 콩 등의 농산물이 일본으로 대량 유출되는 것이 조선 민중의 생활을 압박했다. 지배층의 부정과 악정 무거운 세금에 고통 받던 농민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고 각지로 반란이 퍼져나갔다. 1894년에는 동학신앙을 중심으로 한 민중이 농민과 손잡고 난을 일으켜 " 외국 세력을 제거하라" 는 주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갑오농민전쟁) (198쪽)
	2001년	1894년 조선에서는 개국이 가져온 생활 불안으로 인해 외국세력을 추방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의 봉기가 일어났다. 조선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도권을 얻기 위하여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169쪽)
扶桑社	2001년	1894년 조선 남부에 동학의 난(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 우는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동학당은 서양의 크리스트교(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동학)를 믿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외국인과 부패한 관리 추방을 목표로 하여, 한때는 수도 한성(현재의 서울)에 육박하는 기세를 보였다. 극소수의 병력밖에 지니지 못한 조선은 청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청했으나, 일본도 갑신사변 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고, 일청 양군이 충돌되어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218쪽)

1894년부터 전개되는 동학농민운동은 양반사회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규모적인 농민들의 반항운동이며 일본상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항쟁이기도 했다. 일본교과서는 이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배외적인 민중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몇몇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농민반란 또는 농민폭동으로 기술함으로서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를 무시하여 민중운동으로써의 성격을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청・일 전쟁과 관련지어서 볼 때 당시의 청나라와 일본의 먹잇감으로서 묘사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당시의 정세가 정세이었지만 한 나라를 먹잇감정도로 표현함으로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능력하고 비굴하며 멸시의 대상으로 그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후소샤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자면 동학농민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미 학계에서는 이를 동학농민운동, 농민전쟁, 동학 혁명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혁명, 전쟁, 운동이란 용어가 보편적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이라고 서술 한 것은 이것이 다분히 비하 식 서술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일제시기에는 농민전쟁을 동학당의 반란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지난 현재의 교과서에서 그 당시와 똑같은 용어로 서술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영토를 침략한 외국세력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것의 성격이 반란이나 폭동이라고 한다면, 침략의 주체인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반란・폭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또한 자신들이 합법적인 세력이란 억지논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주된 의도는 침략세력인 일본에 반대하고 국내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었다.[15] 이를 침략국인 일본에서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경솔한 교과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5) 이를 뒷받침하는 국사교과서의 관련 서술은 다음과 같다.
" 고부 봉기로부터 1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 농민 운동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뒤에 항일 의병 전쟁에 참전하여 항일 투쟁의 전통을 이어 갔다." ,교육인적자원부,『중학교 국사』 ,교학사,2002,p.210.

3.4. 주권침탈과 저항운동

<표-6> 주권침탈과 저항운동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검정년도	주권침탈과 저항운동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일러 전쟁 후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 총감부 라는 관청을 두어 경찰과 내정권을 장악하고 이어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조선의 민중은 무기를 들고 각지에서 일어나 의병운동 등을 일으켜 격렬히 저항하였지만 일본은 군대로서 이를 진압했다. 1909년 초대 한국 총감이었던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만주의 하얼빈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10년에는 일본의 군대와 경찰이 서울을 경계하는 가운데 한국 황제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일본에 양도하는 조약을 조인케 해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병합하였다. 이를 한국병합이라 한다.(217쪽 1-10행)
	2001년	일러 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압력을 가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통감부라는 관청을 두어 한국의 국내 정치도 지배하였다. 더욱이 군대도 해산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 조선의 민중은 무기를 들고 각지에서 일어나 의병운동 등을 일으키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1909년에는 조선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 일본은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군대의 힘으로 진압하였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의 군대가 경계하는 가운데 한국의 황제가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을 일본에 위임하는 조약을 조인시켜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병합하였다.(한국병합) 145쪽 1-3행 그림: 일본에 저항하여 봉기한 조선 병사들과 탄압하는 일본병사 지도: 외국자본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철도 (경부, 경인, 경의선도 보임)
大阪書籍	1996년	일러 전쟁 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보호국이 되어 한국통감부를 두고 조선을 지배하였습니다. 해산 당한 병사는 농민과 함께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의병이라 불리며 각지에서 일본의 지배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伊藤博文이 조선의 청년 안중근에게 사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1910년 마침내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를 한국병합이라고 합니다.(207쪽)
	2001년	일로 전쟁 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한국통감부를 두고, 이어 조선의 내정권도 장악하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당한 병사는 농민과 함께 각지에서 일본의 지배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청년 안중근에게 사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 후,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 이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한다.(134쪽)
帝國書院	1996년	일러 전쟁에 승리하자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아 총독부를 두

		고 한국의 외교권과 내정 실권을 빼앗았다. 오래지 않아 한국의 군대도 해산시켰으며 1910년에는 한국의 독립을 완전히 빼앗았다.(한국합병) 그 뒤 일본은 36년에 걸쳐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무력으로 지배하며 조선민족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타쿠보쿠의 노래: 강화되는 일본의 지배에 대해 조선민족은 독립을 지키는 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의 청년인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등 일본의 지배에 거세게 반대하였으나 제국주의화 한 일본은 군대의 힘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 이때 일본의 가인 이시가와 타쿠보는「지도 위 조선에 시커멓게 먹물을 바르는 가을바람을 듣는다.」고 노래했다. 그러나 그 무렵 타쿠보처럼 한국병합을 비판적으로 본 일본은 적었다. 일본은 어떻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일까? (214쪽)
	2001년	1905년,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은 후, 이토우 히로부미를 한국총감으로 삼아 파견하고, 일본은 군대의 힘으로 억눌렀다. 더욱이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고, 조선 총감부를 두어 지배를 시작하고, 한국의 수도 한성을 경성으로 고쳤다. (170쪽) **사진 : 동경으로 옮겨진 한국 황태자와 이토 히로부미(170쪽 위)** 외국에서 본 일본 한국 교과서에 보이는 안중근 안중근은 이토를 사살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암살자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민족적 영웅으로서 존경받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중근은 한국 침략의 원흉인 伊藤博文이 대륙 침략에 관하여 러시아 대표와 교섭하기 위하여 만주의 하얼빈에 온 것을 사살하였다. 안중근의 이 행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강한 독립정신을 잘 표시한 것이다.」(171쪽) **지도 :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한국민중의 저항운동(1906-1911)**
教育出版社	1996년	일러 전쟁 뒤인 1905년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듬해에는 총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의 실권을 장악하여 군대를 해산시켰다. 한국의 민중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각지에서 의병투쟁을 거듭하였는데 그러한 속에서 초대 총감인 이토오 히로부미가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살해되었다. 일본은 반일 항쟁을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누르고 1910년에는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합병해(한국병합)조선이라 부르며 식민지지배를 하였다.(210쪽)
	2001년	일러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윽고 한국의 내정의 실권을 잡고, 군대도 해산시켰다. 해산당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무기를 들고 일본과 싸웠다. 이것을 의병이라고 한다. 1910년에는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한국병합). 일본은 조선에 총독부를 두고, 조선을 지배하였다. (주1)(162쪽) 사진 : **한국의 황태자와 이토 히로부미** 이토는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되었다. 한국의 황태자는 일본의 옷을 입고 있다.(162쪽) 사진 : **반일전쟁을 수행한 의병들**(163쪽 위)

東京書籍	1996년	일러 전쟁 후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진행하였다. 1905년 원로 이토 히로부미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는다는 것을 억지로 인정케 했다. 이토오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고 일본은 한성에 총감부를 두어 내정과 외교를 일본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민중의 격렬한 저항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나 일본은 군대의 힘으로 억압하였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아 조선총독부를 두고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사진1)일본에 저항하는 의병: 독립을 지향하는 조선인들은 의병을 결성하여 일본에 저항하였다. 사진(2)안중근: 안중근은 1879년에 태어났으며 청년기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스스로 교육을 맡아 애국운동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자 의병에 참가하였다. 1909년 침략의 중심인물로서 초대 한국 총감인 이토오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였다. 유고인 동양 평화론에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연대하여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암살자로 되어 있지만 한국과 북조선에서는 민족적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220쪽)
	2001년	일로 전쟁 후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의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1905년에는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에는 황제가 퇴위 당하였으며, 내정은 한국통감부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민족적 저항운동이 퍼져, 일본에 의해 해산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일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무력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 지배를 밀고 나갔습니다.(144-145쪽)
清水書院	1996년	일러 전쟁 후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가 본격화되었다. 1905년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伊藤博文이 한국통감이 되었다. 일본은 또 1907년에는 황제를 퇴위시키고 내정을 장악해 군대를 해산시켰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 한국에서는 민족적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 해산 당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일어섰으며 의병전쟁이라 불리는 무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저항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고.....(217쪽) 그림) 의병전쟁: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조선인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伊藤博文이 조선의 청년 안중근에게 사살되는 사건도 있어났습니다.
	2001년	한국에 관해서는 구미 강국의 지지를 얻은 데다 1905년에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외교권을 뺏고, 통감을 두어 내정 감독도 도모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민은 격렬히 저항하여, 애국자 안중근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암살하였다. 그 다음해(1910년)에 일본은 한국병합을 강행하였다.(152쪽)
日本文教出版社	1996년	일본은 일러 전쟁 중에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아 점차 군사 외교 권

		한을 빼앗고 1907년에는 군대를 해산시켰다. 한국 국민은 이에 격렬히 저항하여 1909년에는 지금도 한국에서 애국자로 되어있는 안중근이 초대 한국총감 伊藤博文을 암살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10년 한국병합을 강행하였다. 그림) 한국의 의병 : 민중의 자발적인 무장조직을 의병이라 불렀다. 약 15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항일게릴라로서 일본군에 저항했다.(206쪽)
	2001년	일러 전쟁 후,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아, 통감부를 두어 내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며 각지에서 의병 투쟁을 되풀이하였다. 그러하던 중 안중근이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만주의 하얼빈에서 암살 하였다. 일본은 반일항쟁을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누르고, 1910년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병합하고(한국병합), 조선이라 부르며 식민지로서 지배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조국을 잃고, 동화를 강제당하며, 만주나 일본으로의 이주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72쪽)
扶桑社	2001년	일러 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한국통감부를 두고 지배를 강화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조선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서로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10년 일본은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을 배경으로 누르고 병합을 단행하였다.(한국병합) 한국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로 삼은 조선에서 철도·관개의 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행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 그때까지의 경작지로부터 쫓겨난 농민도 적지 않았고, 또한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사람들은 일본에의 반감이 강해졌다.(240쪽) 사진 : 조선총독부 건물 사진 : 한국복장의 이토 히로부미

일본은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한일 의정서 제 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의 과정을 거쳐 1910년 마침내 한국의 주권을 침탈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은 의병운동과 같은 무력투쟁을 전개하여 국권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분석대상 일본 교과서에는 일본 침략과정과 한국 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일본 침략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교과서에 안중근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왜 살해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한국에 대한 국권침탈 계획의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주권침탈의 과정 서술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보호국”이란 명분은 그 당시의 통감부 설치에 대한 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버젓이 교과서에 서술함으로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듯 인식되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한국이 연약하여 강대국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일본이 보호하기 위하여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지배한 것은 당위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일본의 주권 침탈에서 체결한 조약은 합법을 가장한 무력 침략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침략, 진압, 억압 등의 표현도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침략의 의도를 약화시키고 있음이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보호되어져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이나 억압, 진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에도 씌어진 것은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후소샤의 서술은 이러한 침략에 대한 합리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방위와 만주의 권익을 위하여 한국의 국권을 침탈했다는 것이다. 침략에 대한 합리화 치고는 소극적인 이유로 보여 지며 주변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는 갖다 붙인 합리화의 좋은 구실일 뿐인 것이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과 관련하여 문교출판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암살은 범죄행위다. 안중근은 한국의 의병장의 자격으로 한국침략의 원흉에 대한 정당한 민족적 응징을 가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16] 그러므로 암살로 표현한 것은 안중근 의사를 일개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그 역사적인 의의를 말살케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또한 문교출판은 의병투쟁을 항일 게릴라로 규정하였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한 구국의 독립전쟁을 게릴라전쟁으로 서술함으로 일개 반란의 책동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분명 왜곡 서술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이러한 서술 의도는 당시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세계사적 조류를 은폐하고 미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

16) 이에 대한 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 의병장으로 국내외에서 항일전을 전개하고 있던 안중근은, 초대 통감으로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대표와 회담하기 위하여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그를 사살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1909),교육인적자원부,『중학교 국사』,교학사,2002,p.236.

3.5. 일본의 식민지 정책

<표-7>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검정년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한 뒤 朝鮮總督府를 두었다. 그리고 천황 직속의 총독이 조선의 일본군을 통솔하여 각지에 군대와 경찰을 두고 조선을 지배하였다. 또한 일본의 많은 회사가 조선으로 진출하여 조선반도를 종단하는 철도와 항구를 만들었으며 토지회사는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았다.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본과 만주 등으로 부득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본 국내에서는 임금과 사회생활의 차별이 심해지고 일본인이 조선인을 경멸하는 의식이 생성되었다. 한편 병합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은 그 후로도 뿌리 깊게 이어졌다. (217쪽 11-18행)
	2001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한 후 朝鮮總督府를 두었다. 천황에 직속하는 총독에는 일본의 군인이 임명되어 조선의 각지에 군대를 두고 지배하였다. 총독부는 토지의 소유자 조사를 추진하였지만 그 결과 토지는 진출한 일본인이나 조선의 유력자들 아래로 모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었으며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은 일본이나 만주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다. 일본국내에서는 임금이나 사회생활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생겨나고 조선인을 경멸하는 의식도 강해졌다. 한편 병합에 반대하는 조선인들의 저항은 그 이후에도 뿌리 깊게 계속되었다.(145쪽 4-13행)
大阪書籍	1996년	병합 후 천황직속의 朝鮮總督府가 설치되어 일본의 군인이 총독이 되어 조선 구석구석까지 일본은 군대와 경찰을 배치하여 저항운동을 탄압하였다.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를 강제로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조선민족을 일본으로 동화하려는 식민지 정책을 진척시켰지만 조선과 대만 등 식민지인들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일본인의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이 한층 강해졌고 한편 일본의 지배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도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한국 병합 후의 조선에서는 일본이 토지조사를 진척시켜 농민들로부터 많은 경지를 빼앗고 기업 활동도 규제하여 조선의 산업을 억압하였습니다. 토지와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은 일본과 만주로 건너가 일본인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해야만 했습니다.그림) 일본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조선의 어린이들. 한국병합 당시의 조선인들의 저항지점(1906-1911) (207쪽 위)
	2001년	병합 후, 朝鮮總督府가 설치되어 일본 군인이 총독이 되고, 조선 전토에 일본의 군대나 경찰을 배치하여, 저항운동을 탄압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나 일본 역사를 강제적으로 가르쳤다. 이와 같이, 조선민족의 습관이나 문화를 부정하고, 일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식민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대만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무렵부터 일본인의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한편 일본의 지배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도

		더욱 계속되어 갔다.(134쪽) 사진 : 朝鮮總督府 (134쪽) 지도 : 조선 사람들의 저항지점(1906-1911) (134쪽 위)
帝國書院	1996년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조선인 학교와 수업에서 일본어를 「국어」로서 강요하고 조선의 역사와 지리보다는 일본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쳐 조선인으로부터 민족의 자각과 긍지를 빼앗고자 했다. 회사의 설립도 허가제로 해서 조선인 회사는 가능한 한 만들 수 없게 했다. 또한 토지조사를 행해 많은 조선인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았다. 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조선인이 일본과 중국 동북부로 이주하였으나 조선인은 임금과 사회생활 외에도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속에서 일본인 중에 조선인을 식민지 민족으로서 차별하였다.(215쪽)
	2001년	한국의 학교에서는 일본어나 일본의 역사, 지리가 가르쳐지게 되거나, 한국의 고유의 역사나 문화를 없앨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많은 농민이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인이 되는 등, 냉엄한 생활을 강요받았다.(171쪽)
教育出版社	1996년	일본은 총감부를 朝鮮總督府라 하고 토지조사를 강행했다. 그로 인해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강제하여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을 없애고 일본으로 동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일본인은 조선인들을 식민지 민족으로서 차별하였다.(211쪽)
	2001년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조선인 학교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강제하였고, 조선의 역사・지리보다도 일본의 역사・지리를 가르쳐, 조선인으로부터 민족적 자각이나 긍지를 뺏으려고 하였다. 또한, 토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조선인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았다. 이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진 많은 조선인이(162쪽) 중국 동북부라든가 일본으로 이주하였으나, 조선인은 임금이나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인을 경멸하고 차별하는 잘못된 생각이 일본인 속에 점점 퍼졌다. 식민지 지배 속에서, 일본은 36년간에 걸쳐 조선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163쪽)
東京書籍	1996년	일본에 합병된 한국에서는 토지조사가 시행돼 많은 농민이 경작할 권리를 갖고 있던 토지를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몰수당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은 소작인이 되기도 하고 일을 찾아 일본과 만주(중국동북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주한 곳에서도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혹독한 생활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일본역사 지리를 교육받게 되어 조선인 고유의 문화를 없애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조선인을 차별하는 그릇된 인식이 굳어져 갔다.(221쪽)
	2001년	학교에서는 조선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일본사와 일본어를 가르치며 일본인에 동화시키는 교육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삼아 행해진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 소유권이 명확

		하지 않다고 하여 많은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작인이 되거나 일본이나 만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대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1945년의 일본 패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145쪽)
清水書院	1996년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고 朝鮮總督府에 의해 무력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 지배가 추진되었다. 학교에서는 조선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일본역사와 일본어를 가르치고 민족의 자긍과 자각을 빼앗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토지제도와 근대화를 구실로 행해진 토지조사사업에는 많은 농민이 소작인이 되거나 부득이 일본과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각종 사회적 경제적인 차별을 받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그 후 36년 동안 계속되었다.(217쪽) 그림) 일본어로 수업 받는 조선아이들.
	2001년	총독부는 일본어 사용과 일본식 성명으로의 개명, 신사에 대한 참배를 의무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에의 동화정책은 조조선의 문화와 친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한글 개량 등 문화면에서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심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152쪽)
日本文教出版社	1996년	병합 후 일본은(한성, 지금의 서울)에 朝鮮總督府를 설치하여 각지에 일본군을 두고 경찰을 지배하에 넣고 식민지를 진행시켰다. 우선 토지 제도를 고쳤는데 그때는 국가와 극히 소수의 지주에게만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은 경작할 땅을 잃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본과 만주로 이주했다. 그 뒤 일중전쟁이 시작되었을 무렵 총독부는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고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했으며 신사참배를 의무화 했다. 이러한 황민화 정책은 조선 고유의 문화와 친족 결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한글의 개량 등 문화측면에서도 일본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던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동화정책에 깊은 분노를 가졌다.(206쪽)
	2001년	일본어를 강제하여, 민족의 자각을 없애고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172쪽 좌상단의 사진) 사진 : 안중근 「구국의 영웅」이 되어, 한국의 서울 남산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172쪽 우 하단의 사진)
扶桑社	2001년	한편 조선에서는 1919년 3월1일 국왕의 장례식에 모인 지식인들이 서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데모행진을 벌이자, 이 독립운동은 순식간에 조선 전토로 퍼져갔다.(3.1 독립운동). 朝鮮總督府(일본이 조선 지배를 위해 설치한 통치기관)는 이것을 무력으로 탄압하였으나, 그 한편으로 그때까지의 통치방식을 바꾸었다.(249쪽)

1910년 8월29일 이른바 일본 측 표현으로 한국병합, 한일합방 또는 우리 측 표현으로 경술국치일이라고 불리 우는 이날 한국은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

하고 말았다. 조선을 강제 점령한 일본은 식민지 정책으로 무단통치를 전개하였으며 이것을 동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인에 대한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나아가 민족문화를 말살시켜 조선인을 일본인 화 하려는 교육정책을 실시했고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방법의 하나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를 약탈했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로 전환하였지만 이것은 더욱 식민지화를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서술은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 8권은 모두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배와 침략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빈약하며 간단하게 비쳐지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계는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이른바 "헌병경찰제도"에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그 내용이 이해될 수 있게 기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세히 기술된 오사카 서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리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출판사 2001년 검정 본에서 일본이 36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대목은 매우 고무적이다.

무단통치에 대한 내용 중 토지조사 사업에 의한 토지수탈은 후소샤를 제외하고 모두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토지조사 사업은 근대적 토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효율적인 토지약탈과 식민지 지배를 위해 확립한 것이다. 따라서 식민 지배 체제하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이 옳다. 청수서원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 교과서들에서는 그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밖에 동화정책은 동경서적과 후소샤를 제외하고 모두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동화 정책은 교육을 통한 우민화 정책의 추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힌 교과서는 없음을 볼 수 있다.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해서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서 언급한 교과서는 동경서적과 오사카서적, 후소샤 셋뿐이다. 일제의 식민지배의 무단 통치에 대한 저항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한 저항의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독립 운동에 대한 당위성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 3.1운동

<표-8> 3·1 운동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검정년도	3.1운동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1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러시아 혁명과 민족자결주장에 힘입어 새로운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한국병합 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고통 받는 조선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였다. 1919년 3월1일 서울(당시에는 경성)에서 지식인 등이 ①독립선언문을 발표하자 국왕의 장례식에 모였던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다. 이 독립운동은 조선 땅 전체로 확대되었다.(3·1독립운동) 독립운동은 3달에 걸쳐 이어져, 총 200만 명이 참가하여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대내에 보여주었다.(236쪽 1-2행) 주1) 인류의 평등 민족의 권리를 읊으며 일본에 반성을 요구하고 조선국의 독립과 조선민족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2001년	대전 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러시아혁명이나 민족자결의 주장에 고무되어 새로운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한국병합 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고통 받던 조선 사람들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일어섰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 중이던 1919년 3월1일 서울의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조선의 독립은 민족의 당연한 권리이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도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동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은 조선 전체로 확대되어 이후 3개월에 걸쳐 계속되었다.(3 · 1독립운동) 운동에는 연 200만 명이 참가하여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내외에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군대를 파견하여 심한 탄압을 가하였다. 주)162쪽 1-13행) 주) 일본의 탄압에 의한 사망자는 약 8000명에 이른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사진 3 · 1독립운동 :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서울의 중심가를 행진하는 여학생들 지도 3 · 1 독립운동이 퍼졌던 지역
大阪書籍	1996년	한국병합 후의 조선에서는 일본이 토지조사를 진척시켜 농민들로부터 많은 경지를 빼앗고 기업 활동도 규제하여 조선의 산업을 억압하였습니다. 토지와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은 일본과 만주로 건너가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1919년 3월1일 조선의 독립을 꾀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국왕의 장례식에 모였던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민중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데모행진을 하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윽고 조선국토 전체로 퍼져나가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하여 진압을 꾀해 조선 민중에게 8000명 가량의 사망자를 내세웠습니다. 이 운동은 3·1독립운동이라 불리며 이후의 조선 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229쪽)
	2001년	한국병합 후의 조선에서는 일본이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를 농민 등으로부터 빼앗고, 더욱이 기업 활동도 규제하였다. 토지나 직업을 잃은 사람들은 일본이나 만주에 건너가, 일본인보다 적은

		임금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49쪽) 1919년 3월 1일,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서울(경성)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수천의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데모 행진을 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곧이어 조선 전토로 확대되어, 200만이라고도 말해지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이 되고, 일본정부는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이 운동은 3 · 1 독립운동이라고 불리며, 그 후의 조선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149쪽) 사진 : 3 · 1 독립운동 서울에서 행진을 하는 여자학생들이며, 원내의 소녀는 16세로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었던 유관순이다. (148쪽 위)
帝國書院	1996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자유와 독립을 빼앗긴 조선민족은 1919년 3월1일 서울 같은 주요 도시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은 처음에 평화적인 비폭력 운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순식간에 조선 전역으로 퍼졌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탄압하였으므로 마침내 조선민중은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운동은 3개월에 걸쳐 계속되었다. 주)200만 명이 참가하여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내외에 보였다. 이를 3·1운동이라 한다.<독립만세>의 목소리 조선의 15세 유관순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 서울에서 1919년 3월1일 독립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것을 본 그녀는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만세를 외칩시다. 하고 호소하였다. 그로 인해 그녀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독립만세를 끊임없이 외쳐 젊은 목숨을 일본에 빼앗겼다. 그녀는 지금 조선민족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그녀가 참가했던 운동은 어떠한 운동이었을까?(238-239쪽) 일본인이 본 3·1 독립운동: 조선의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민예연구가 아나기 무네요시는 독립이 조선인의 이상인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게 형제인 조선이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조선의 불명예이기보다는 일본의 수치이다.” 라고 주장하며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억압한 일본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저널리스트였던 이시바시 탄산도 “조선문제해결의 열쇠는 조선의 독립과 자치에 있으며 조선인은 독립을 얻을 때까지 결코 그 반항을 멈출 자가 아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에서는 3·1독립운동을 폭동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또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조선에서도 1919년 3월1일, 경성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이 행해져, 독립만세를 외치는 민중운동이 조선 각지로 퍼졌다(3·1운동). (189쪽) 같은 세대의 아이들 **유관순** 서울의 이화학당(여자교)에 재학 중 3·1 운동을 만났다. 곧 운동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을 받고 옥사하였다. 16세였다. (189쪽)
教育出版社	1996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는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1919년 3월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약 3개월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3·1독립운동) 일본은

		군대와 경찰에 의해 운동을 탄압하여 약 8000명의 사망자와 16000명의 부상자를 냈다.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은 그 후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돼, 일본의 지배를 흔들었다.(230-231쪽)
	2001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인들은 1919년 3월1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주1)하고, 거리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운동은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본은 군대나 경찰의 힘으로, 이것을 탄압하였다. 이것에 대해, 조선의 사람들은 각지에서 일어나, 독립운동은 全土로 퍼졌다. 많은 희생자(주2)가 나왔으나, 운동은 3개월에 걸쳐 계속되었다. 약 200만 명이 참가하여,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내외에 보여주었다. 이것을 3・1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182쪽) (주1) 그 독립선언서는 인류의 평등, 민족자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본에 반성을 요구하고, 조선의 독립, 조선민족의 자유를 선언하였다.(182쪽) (주2) 조선인의 사망자는 약 7500명, 체포된 자는 약 4만 7000명이나 되었다. (182쪽) **지도 : 조선에서의 독립운동**(183쪽 위)
東京書籍	1996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던 대 독립의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1919년 3월1일 경성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이 낭독되었고 약 8000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냈다. 그러나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237쪽)
	2001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여있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을 노리는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문장을 발표하고,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데모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극 받은 독립운동은 순식간에 조선 전역으로 퍼졌습니다(3・1독립운동). 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는 한편, 이제까지의 무단적인 지배정책을 완화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독립운동은 그 후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157쪽)
淸水書院	1996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있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1일 서울에서 독립을 목표로 한 지식인과 학생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문장을 발표하였으며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데모행진을 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독립운동은 순식간에 조선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를 3・1독립운동이라고 부른다. 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무단지배정책을 늦추는 자세를 보였지만 독립운동은 그 후로도 끊이지 않았다.(235쪽) 그림)조선의 잔다르크: 한국에 있는 유관순이라는 16세 소녀의 동상입니다. 그녀는 조선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에 참가하도록 사람들에게 호소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도 독립만세를 계속 외치며 마침내 목숨을 빼앗겼지만 그 의연한 태도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2001년	일본은 朝鮮總督府를 두고, 대만과 비슷한 통치를 행하였으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사람들은 저항을 계속하여, 1919년에는 전 황제의 사거(死去)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의 심한 탄압을 받았다(3・1 독립운동). 지도 : 3・1 독립운동 조선의 218개 군 가운데 211개의 군으로 운동이

		퍼졌습니다..(152쪽 좌하단) **사진 : 3·1 독립운동의 부조** 이 소녀(유관순)은 15세로서 운동에 참가하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데모를 조직하였는데, 체포되어 1920년 16세로 옥사하였습니다.(서울시 파고다 공원 내) (153쪽 좌 상단)
日本文敎出版社	1996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는 1919년 3월1일 전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유지가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민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데모행진을 하였다. 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퍼져나가 많은 민중이 거의 1년에 걸쳐 이에 참가하였다. 일본은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해서 5만 명 이상의 조선인 사상자를 냈다. 이 3·1독립운동으로 독립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민족의 자각은 한층 높아졌다....3·1운동은 중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림)조선의 218개 군 중 211개의 군에서 운동이 퍼졌다.(227쪽)
	2001년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독립운동이 전역으로 퍼졌다.(3·1 독립운동). 일본은 군대와 경찰에 의해 운동을 탄압하였다.(187쪽)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사람들의 만세 외침과 함께 확산되었다. 유관순은 당시 16세의 여학생이었다. 1919년 4월1일 그녀는 항의 행진의 선두에 섰다. 그러나 붙잡히는 몸이 되어, 다음해 10월 12일, 감옥 안에서 죽었다.(187쪽) 사진 : 고향인 병천면촌에 세워진 유관순의 동상. (187쪽 우중단)
扶桑社	2001년	한편, 조선에서는 1919년 3월1일 구국왕의 장례식에 모인 지식인들이 서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데모행진을 벌이자, 이 독립운동은 순식간에 조선 전토로 퍼져갔다.(3·1독립운동). 조선총독부(일본이 조선 지배를 위해 설치한 통치기관)는 이것을 무력으로 탄압하였으나, 그 한편으로 그때까지의 통치방식을 바꾸었다.(249쪽)

3·1 독립운동은 일제의 강권적 통치로 수탈 억압되었던 우리 민족이 끊임없는 민족적 의지의 실천 속에서 폭압 정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해 온 결과였다. 3·1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전환, 국내의 독립운동 활성화와 무장독립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중국의 5·4운동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3·1운동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1919년 3월1일 조선 민족의 토지 몰수와 일본인 및 조선인의 반봉건적 지주육성의 기본사업이 완료된 반년후의 일이었다. 무기를 거의 가지지 않은 조선 민중이 일본 군대와 전국의 각지 618개소에서 847회나 되는 전투를 주고받았다. 총독부의 보고서에는 7909명의 독립투사가 일본군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후 봉기는 진압 되었지만 게릴라 전투는 조선 국내에서도 계속 되었다. 이후 일본은 총독부 문관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조선군

과 총독부를 분리하였으며 또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꾸었지만 그것이 조선의 지배를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교과서 서술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사건을 3·1독립운동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만세사건"이나 "폭동"으로 기술한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동경서적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러시아 혁명이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17] 등에서 찾음으로써 한민족의 자주적인 독립의지에 약간의 흠집을 입혔다는 점이다. 물론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엄연히 3·1운동은 의존적인 운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제침략에 대한 우리민족의 저력이 나타난 것이며 또한 3·1운동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또한 제국서원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3 · 1운동의 정황과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청수서원에서 유관순 열사를 한국의 잔다르크로 표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4개의 교과서에서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독립의 욕구가 일어났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교과서에는 3·1운동을 우발적인 데모정도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 "독립을 선언하여 조선 전역으로 퍼졌다",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라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서 한국 민족의 민족적, 내재적 역량은 배제된 채 그냥 그저 그런 시위 정도로 다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3·1운동은 일제의 강권적 통치에 대해 저항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운동이었다. 따라서 3·1운동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기술은 미흡하다 보여 진다. 또한 3·1운동의 서술에 있어 주목할 점은 피해상황이다. 이 기간에 일본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46,948명, 피살자는 7,509명 피상자는 15,961명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피해상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고 일부는 약8000명의

17) 제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대통령 윌슨은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윌슨은 식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 동안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약소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사망자와 부상자로 축소 서술하였다. 특히 3·1운동을 데모로 표기한 교과서가 일부 있다.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고 그들의 잔인한 탄압과 만행을 은폐하고 축소함으로 자칫 역사왜곡으로 빠질 수도 있다 보여 진다. 끝으로 분석교과서 대부분의 서술방식이 평면적이고 단순하여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의를 조금은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3.7.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표-9> 관동대지진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검정년도	관동대지진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1923년 9월1일 진도 7.9라는 대지진이 남 관동 일대를 덮쳤다. 이재민은 약 350만 명, 사망, 행방불명자는 14만을 넘었다. 이를 관동대지진이라고 부른다. 이 혼란 와중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던져 넣었다』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켰다.』 등의 소문을 경찰 등이 퍼뜨렸다.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조선인과 수백 명의 중국인이 군대와 경찰 주민이 만든 자경단에 의해 학살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 지도자 중에서도 그들을 비국민으로 몰아붙이는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었다. 관동대지진에 의한 피해 총액은 국가 예산의 거의 4배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부흥하는데 거액의 비용이 필요했으며, 일본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240쪽 1-10행) 주) 이 사건은 사람들이 평소 조선인과 중국인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근거 없는 말을 사실로 믿어버려 일어난 것이다. 그림)관동대지진은 오전 11시 58분에 일어났다. 점심 준비할 시간이라서 불을 쓰고 있는 가정이 많아 대화재가 되었다.
	2001년	1923년 9월1일 진도 7.9라고 하는 대지진이 남부 관동일대를 덮쳐, 요코하마, 도쿄 등에서는 全市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약 350만 명에 이르며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14만 명을 넘었다. 대지진의 혼란 중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었다. 이 때문에 수천 명의 조선인과 수백 명의 중국인이 군대 · 경찰이나, 주민들이 만든 자경단에 의해 학살되었다.1) (165쪽 11-17행) 1) 이 사건은 사람들이 평소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 보복을 두려워하여 유언비어를 사실로 믿고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大阪書籍	1996년	1923년 9월1일 진도 7.9라는 대지진이 남 관동 일대를 덮쳤습니다. 그때의 동경은 삼일 동안이나 불탔습니다. 이것이 관동대지진입니다. 피해

		를 입은 7부 현의 피해자는 약 340만 명,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14만 명에 이르고, 정치와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고 그때까지의 불경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거나 방화를 하고 있다거나 우물에 독을 넣고 있다는 악성루머가 경찰 등에 의해 퍼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군대 경찰이 부저항의 조선인등을 다수 학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와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빚어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의 지도자 등에서는 군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236쪽)
	2001년	1923년 9월 1일, 진도 7.9이라는 대지진이 남부 관동 일대를 덮쳤다. 그때의 화재로 동경은 3일간이나 계속 불탔다. 이것이 관동대지진이다. 피해를 입은 7府縣의 이재민이 약 340만 명, 사망자 · 행방불명자가 14만 명도 넘었으며, 정치나 경제는 대 혼란에 빠졌다. 특히 동경, 요코하마의 기업이나 은행의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등,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대전 후의 불경기를 더욱 깊게 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집어넣고 있다든지,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주민이나 경찰 등에 의해 퍼졌다. 그래서, 차별의식이나 저항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수 천 명의 조선인 이외에, 사회주의자나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이나 군대 ·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림 : 자경단 무장한 주민이 순회하고 있다. (154쪽 위)
帝國書院	1996년	1923년 9월1일 관동지방을 대지진이 덮쳤다. 도쿄 요코하마를 비롯해 관동 각지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지진과 대화재로 인해 약 70만호가 재해를 입었으며 사망, 행방불명자는 14만 명에 이르렀다. 혼란 속에서 유언비어가 퍼져 군대 경찰 주민으로 이루어진 자경단에 의해 수천 명이나 되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가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242쪽) (그림) 진도 7.9의 대지진으로 교통과 전기 등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2001년	1923년 9월1일 相模灣을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이 동경과 요코하마를 직격하였다. 마침, 각 가정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시간으로, 순식간에 큰 불이 나, 사망자・행방불명자 14만 명 이상, 피해자 340만 명 이상이라는 큰 피해를 냈다. 주택이나 공장이 도시에 밀집해 있던 것이 피해를 크게 하였다. 혼란 속에서 「일본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자경단을 만든 주민이 일본도・죽창으로 무장하고, 조선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났다.(195쪽)
教育出版社	1996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고조되고 있던 중 1923년 9월1일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다. 점심시간을 차리던 시간이기도 해서 도쿄와 요코하마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이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4만에 이르렀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사회주의와 노동운동가 이외에 수천 명이나 되는 조선인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아 불경기가 한 층 심해졌다.(237쪽)

	2001년	1923년 9월 1일, 사가미만을 진원지로 하는 대지진이 관동지방을 덮쳤다. 지진과 화재에 의하여, 도쿄・요코하마를 비롯한 관동지방 남부는 커다란 피해를 입어, 피해 가옥은 약 70만호,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다. 혼란 중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확대되고, 주민으로 만들어진 자경단이나 경찰・군대 등에 의해, 수천 명의 조선인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사회주의자・노동운동가 중에도 살해된 사람이 있었다.(185쪽)
東京書籍	1996년	1923년 9월1일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진도 7.9의 대지진이 덮쳤다. 도쿄 요코하마 등지의 대도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었으며 경제적인 피해가 대단히 커서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아 주민이 결성한 자경단에 의해 수천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살해되었고 그밖에 군대와 경찰이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262쪽) (그림) 이 사진은 점심시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화재에 의한 피해가 많아 시가지의 2/3가 소실되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4만 명 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은 이재민은 340만 명 이상이었다.
	2001년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동경・요코하마 등의 지역은 괴멸상태가 되었습니다. 주1) 주1) 진재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떠돌아 많은 조선인, 중국인과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되었습니다.(162쪽)
清水書院	1996년	1923년 9월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괴멸 상태였으며 수도권은 혼란에 빠졌다.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말이 퍼져 많은 조선인 중국인 사회주의자 등이 죽임을 당했다.(241쪽) (그림)자경단 : 경찰도 경계를 호소하는 속에서 자경단이 조직되어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희생자는 수천 명이라고 한다.
	2001년	1923뇬 9월1일 오전 11시 58분, 관동지방을 대지진이 덮쳤습니다. 심한 흔들림과 진파에 더하여 동경・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진재가 되었습니다. 이 진재에서의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4만을 넘고, 파손되거나 소실된 가옥은 70만 호에 달하여,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진재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소문이 퍼지자, 경찰과 군대는 이를 사실이라며 조선인을 체포하고, 민중도 자경단을 조직하여 조선인과 중국인을 살해하였습니다. 약 7000명의 조선인, 200명의 중국인, 연루된 일본이 60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의 지도자도 경찰과 군대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진재로부터 72년 뒤인 1995년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진재가 발생하여, 6400명이나 존귀한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재에서는 헛소문과 약탈, 폭동은 발생하지 않고, 전국으로부터 자원봉사자가 모여 피해자의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로부터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는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172쪽)
日本文教出	1996년	1923년 9월1일 정오 무렵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피해는 관동

版社		전역으로 미쳤으며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민중의 생활은 혼란했고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 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의 일부에서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퍼져 자경단이 조직되어 다수의 조선인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또한 경찰과 군부의 손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 지도자도 살해되었다.(233쪽)
	2001년	이러한 가운데 1923년 9월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다. 점심시간과 겹친 점도 있어, 동경과 요코하마의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70만호의 집이 파손되고,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4만 명을 헤아렸다. 이 혼란 속에서 유언비어가 떠돌아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이외에 많은 조선인이 살해되는 사건 등도 일어났다. 관동대지진에 의해,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불경기는 한층 심해졌다.(195쪽)
扶桑社	2001년	1923년 9월1일에는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요코하마 등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약 70만호가 피해를 입고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을 넘었다.(관동대지진). 이런 혼란 중에,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256쪽)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학살사건은 국사 교과서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 근 · 현대사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9세기 말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들의 역사도 마땅히 우리들의 역사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이주한 동포들은 일본인의 민족 차별로 온갖 수모를 당했고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이주민들은 어느 지역 이주민들 보다 배일사상과 민족의식이 강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주 동포들의 슬픈 과거사를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1923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공황으로 일본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때 일본은 관동대지진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또한 민간이 흉흉해지자 정부 당국은 고조된 일본 국민의 불안의식을 무마시키기 위해 한국인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18] “한국인이 우물 안에 독을 넣는다” , “한국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18) 이를 뒷받침하는 관동 대지진에 관한 일본 언론 기사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자료 1) 지진과 동시에 시내 각처에 있는 가스관이 파열되어 가스가 분출하고 있다. 여기에 조선인들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지르며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120여 개소에서 불이 났으며, 각처에서 폭탄을 던져 불길을 조장하고 있다. 각처의 우물에 독약을 넣고 이재민의 자녀에게 주는 빵 속에 독약을 뿌려서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가와기타 신문, 1923.9.7
(자료 2) 내 부모를, 자식을, 아내를, 형제를 죽인 것도 다 조선놈들이다. 내집을 빼앗는 것도 나를 이렇게까지 주림과 목마름에 괴로움을 주는 것도 다 그놈들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으니 평온할

는 등의 완전히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일반민중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민심수습의 댓가로 7천여명의 한국인이 무고하게 학살당했다.

일본의 국사대사전에는 계엄령으로 출동한 군대는 조선인을 몰아넣고 군대 경찰 자경단의 손으로 수천인에 달하는 조선인이 학살되고 많은 중국인도 살해되었다..... 유언이 허보라고 이해한 당국은 5일부터 자경단의 취제에 나서고 대신해서 검문소를 늘리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이것들에 대한 사건의 규명은 엄격히 금압되었다. 당국은 사건의 책임을 극히 형식적으로 물었을 뿐이고 특히 군대 경찰의 책임은 애써 감추었다.[19]

이런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이 된 위의 교과서들은 관동대지진에 대한 설명이외에 왜 이러한 한국인 학살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분명히 학살사건의 주체가 정부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같이 기술하였다. 어떻게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해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다. 관동대지진의 한국인 학살은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진술은 결국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동경과 오사카 서적에서는 "소문이 경찰 등에 의해서 퍼졌다"라고 언급하여 일본정부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는 서술로 보이기도 하지만 각주에 각각 조선인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라는 식의 서술을 함으로 책임전가식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소샤 교과서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으로 서술함으로서 그 소문의 진

수가 없는 것이다. …(중략)… 민중은 불령선인의 피에 주리고 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인을 조선인으로 잘못 보고 죽인 일이 도쿄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가와기타신문, 1923.9.7

(자료 3) 참모장의 말이 발표되었다. 이번 불령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어서 지휘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시일이 감에 따라 과연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즉 이번 불령선인의 부정 행위 이면에는 사회주의자와 소련의 과격파가 큰 관계를 가진 것 같다. -시모노 신문, 1923.9.8

19)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國史大辭典》 3권, 東京 : 吉川弘文館, 1990, p.894.
한인복, <앞의 논문>, p.83.에서 재인용

위조차 정확히 서술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어서 교과서의 내용만 보아서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조차 알 수가 없게끔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방조하고 계획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묘사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희생된 한국인의 숫자조차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축소·은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만 보아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우발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질렀으며 일본 당국이 동조하고 방조한 사실을 은폐하여 그저 그런 사건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천명을 이유 없이 학살했다는 것이 결코 쉽게 묵과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과하고 일본 측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술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수서원에서는 고베 대지진과 관동대지진을 비교 언급하여 어두운 과거를 재 조명하려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교과서 어느 부분에서도 조선인 학살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반성론적인 가술이 없음을 볼 때 최근의 고베 대지진과의 비교 언급은 매우 무의미한 기술로 여겨진다.

3.8. 일제의 황민화 정책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은 그 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1941). 나아가 일본군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침략하였다. 일본은 전시 동원 체제를 발동하여 한국인을 전쟁터에 동원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민족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였고 내선 일체와 황국 신민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또, 한국말의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만 쓰도록 하였으며, 한국 역사의 교육도 금하였다. 한글로 간행되던 신문도 폐간시키고, 한국말과 역사에 대한 연구도 금지시켰다. 나아가 일본은 이름까지도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강요하였고, 각지에 일본 신사를 세워 참배하도록 하였으며, 어린 학생들

까지도 황국 신민 서사를 외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20]

<표-10> 황민화 정책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분석

교과서	검정년도	황민화 정책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학교에서는 일본어가 강제되었으며 일본인의 역사와 지리가 가르쳐졌다. 식민통치하에 있던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식의 성을 쓸 것(창씨개명)과 신사참배가 강제되었으며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황민화 교육이 진행되었다.(259쪽 13-15행)
	2001년	조선과 대만에서는 일본에의 동화를 강제하는 황민화 정책이 진행되고, 특히 조선에서는 일본식의 성명을 따르도록 하는 창씨개명과 신사에의 참배가 강제되었다.(177쪽 13-15행)
大阪書籍	1996년	..조선에서는 신사참배와 일본식의 성씨를 사용하는 창씨개명을 강제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진척 시켰습니다.(253쪽)
	2001년	또한 조선에서는 신사를 만들어 참배시키거나, 일본식 성명을 따르는 『창씨개명』을 강제하여, 일본에 동화시키는 황민화 정책을 밀고 나갔다. (165쪽)
帝國書院	1996년	정부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황민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짓도록 하였으며 신사 참배를 강제하였다. 또한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각지의 광산과 탄광 등지에서 혹독한 대우를 받고 일하게 했다.(257쪽)
	2001년	식민지였던 조선이나 대만에서는 그들을 황국신민으로 삼는 황민화 정책이 채택되었다. 학교에서는 「국어」로서 일본어가 가르쳐지고, 조선어나 중국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황거를 향하여 경례하는 등의 천황의 숭배도 강요되었다. 더욱이 조선에서는 일본식의 이름을 짓는 창씨개명도 행하여졌다. (207쪽) 사진 : 일본어를 배우는 조선의 생도
教育出版社	1996년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에서는 병사 모집이 시작되고 궁성을 향해 절하도록 강제하거나 고유한 성명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등(창씨개명),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지배가 행해졌다.(253쪽)
	2001년	정부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일본식 성명을 갖게 하고(창씨 개명), 신사에의 참배를 강제했다. 이 동화정책은 대만에서도 똑같이 진행 되었다.(196쪽) 사진 : 조선신궁에 참배하는 조선의 사람들(196쪽 아래)
東京書籍	1996년	일본 정부는 3·1운동이 있은 뒤 일본 내지와의 차이를 좁히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조선의 언론과 출판 등에 약간의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뒤 일본군이 중국으로 침공하는 중요한 군사기지로 삼았고 또 조선인들도 일본 천황의 嫡子이다 라는 정책에 의해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

20)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 (서울: 교학사, 2002), p.261.

		록 했다. 전쟁에서도 남자는 병사로 여자는 慰安婦로 끌어내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다.(281쪽)
	2001년	조선에서는 황민화의 이름 아래 일본어 사용과 조선의 성명을 나타내는 방법을 일본식의 씨명(氏名)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하였습니다. **사진 : 동원된 조선의 젊은이들** 조선에서는 1938년에 육군의 지원병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71쪽 우중단의 사진)
淸水書院	1996년	조선에서는 『황민화』의 이름으로 일본어 사용과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는 창씨개명을 추진하였다. 또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동원하였다. 그림)조선신구에 참배할 것을 강요당하는 조선의 학생 : 일중전쟁 이후 황민화를 철저히 하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제했다. 한 마을에 하나의 신사를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신사 수가 급증하였다.(217쪽)
	2001년	**사진 : 경성의 조선 신궁** 일본은 동화정책을 강화하여 국가 신도의 정책으로서 신사를 만들고 집집마다 신전을 배급한다든지 하였다.(188쪽 좌하단의 사진)
日本文敎出版社	1996년	총독부는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였고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했으며 신사참배를 의무 지웠다, 이러한 황민화 정책은 조선 고유의 문화와 친족 결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한글의 개량 등, 문화 측면에서도 일본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던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동화정책에 깊은 분노를 가졌다.(206쪽)
	2001년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에서는 병사 모집이 시작되고, 궁성과 신사를 향해 절하는 것과 고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였다(창씨개명). 식민지 사람들은 전쟁 하에서 「천황의 백성」에 어울리는 황국의 신민이 되도록 동화를 강요받았다.(203쪽)
扶桑社	2001년	...또한 조선이나 대만에서는 일본인으로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화되고,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284쪽)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소위 內鮮一體[21]를 주장하면서 우선 모든 민족적인 문화 활동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한국민족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대상이 된 일본 교과서 8종은 모두 황민화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21) 내는 내지인 일본을, 선은 조선을 가리킨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으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한 것이다.

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은 없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보여 진다. 하지만 일본서적의 서술 내용 중에 조선의 언론과 출판 등에 약간의 자유를 주었다는 기술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일정부분 미화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서적의 "內地"라는 표현은 일본인들이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일본 본토를 지칭할 때 쓰던 당시의 표현으로서 현 시점에서 교과서 서술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는 식민주의적 사관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후소샤의 교과서 서술은 일관되게 짧은 서술이 특징인데, 단순하게 황민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서술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조선인들의 피해, 부작용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편향주의적인 역사 서술 방식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

3.9. 강제징용・징병・종군위안부

한국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징병,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물적인 약탈만 자행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한국인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 광산이나 공장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하였고, 지원병 제도와 학병제, 징병제를 실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일제는 여성들도 근로 보국대, 여자 근로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더욱이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 위안부[22]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하였다.[23]
> 그림) 일본군 위안소

22) 군대 위안부란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1930년대 초부터 자행된 이러한 만행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23)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 (서울: 교학사, 2002), p.262.

<표-11> 강제징용・징병・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교과서 서술내용

교과서	검정년도	강제징용・징병・종군위안부에 대한 내용
日本書籍	1996년	조선으로부터 70만 명, 중국에서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공장과 광산, 토목공사 등에서 혹독한 조건하에 일을 시켰다. 조선·대만에도 징병제를 시행하여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군대로 보내졌다. 또한, 여성을 慰安婦로서 종군시켜 심하게 취급했다.(264쪽 14-18행)
	2001년	일본 국내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선과 중국의 점령지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내지로 강제적으로 끌려 왔습니다. 강제 연행된 조선인은 약 70만 명, 중국인은 4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아져 일본 병사의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졌습니다. '대동아공영권'은 단지 선전을 위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0쪽 3-5행)
大阪書籍	1996년	조선에서는 약 70만 명 중국에서도 약 4만 명을 강제로 일본으로 연행하여 광산 등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서 전쟁터로 연행하였습니다. 또 대만 조선에도 징병령을 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언론의 통제를 한층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은근히 높아갔습니다(258-262쪽).
	2001년	또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징병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대학생도 전장에 보냈다. 또한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징병령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이 부과되지 않은 15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은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도록 하고, 중학생이나 여학생도 공부를 중지하고 여러 직장에 동원되었다. 게다가, 조선에서 약 70만 명, 중국에서도 약 4만 명을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하여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는 『비상시』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는 한편, 전쟁의 올바른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은밀히 전쟁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사람들 속에 퍼져가고 있었다.(171쪽)
帝國書院	1996년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로 일본으로 연행된 약 70만 명의 조선인과 약 4만 명의 중국인은 탄광 등지에서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징병제 하에서 대만과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내졌다. 또한 많은 조선인 여성 노동위안부로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내졌다. 전국의 강제노동 현장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폭행사건도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폭행과 사고 영양실조 등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던 약70만 명의 조선인 중 실제로 약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271쪽) 사진 참고
	2001년	일본 국내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자, 강제적으로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일본에 데리고 와서, 각지의 탄갱, 광산, 군사시설에서 노동시키는 일도 행하여 졌다. (207쪽) 1941년에 그때까지의 尋堂高等小學校가 國民學校가 되고, 군사교육이 강화되었다. 뒤에는 중학생이나 여학생이 軍需工場에서 일하게 되었다. 일본이 불리해지자, 그때까지 징병되지 않던 대학생들도 전쟁터에 보내지게 되었다. 또한 대만이나 조선에서도 징병이 실시되었다.(208쪽)

教育出版社	1996년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에서는 징병이 실시되었다. 慰安婦로서 전쟁터의 군사를 따라 다니게 된 여성도 있었다.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약 70만 명, 중국에서 약 4만 명이 강제 연행되어 탄광 등에서 노동하도록 강요당했다. 주요 도시에서는 공습이 심해지면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집이 불탄 사람들은 지방으로 떠나 공습이 심해지면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집이 불탄 사람들은 지방으로 떠나거나 불탄 흔적이 있는 방공호에서 생활을 하였다.(262쪽)
	2001년	일중전쟁이 시작되자, 노동력의 부족에 시달렸던 일본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강제적으로 국내의 탄광・광산・공장 등으로 보냈다. 전국의 강제노동의 현장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폭행사건도 많이 일어났다. 이런 폭행이나 사고・영양실조 등에 의해, 강제 연행된 많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사망했다고 말해진다.(197쪽) 사진 : 강제 연행된 사람들의 위령비(197쪽 위)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된 약 70만 명의 조선인이나 약 4만 명의 중국인은 탄광 등의 심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였다(주2). 도한 징병제 하에서, 대만이나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장에 보내졌다. 더욱이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공장 등으로 보내졌다. (204쪽) 주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재일한국・조선인은 한국병합 후의 이주나 이때의 강제연행에 의해,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이 많다.
東京書籍	1996년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데려와서 탄광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인들 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전쟁으로 일본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해졌으므로 조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이들은 광산 군수공장 토목건축업 등에서 위험하고 괴로운 노동을 해야 했다. 이들 지역의 출신자등에는 위안부였던 사람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다고 원자폭탄에 피폭된 사람들 전쟁전 일본령 이었던 미나미가라후토에서 전쟁이 끝나 잔류하게 된 사람들 등이 있었다. 일본의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로서의 배상은 끝났지만 현재 개인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281쪽)
	2001년	일본과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본국의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게 된 조선인, 중국인 등의 노동조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낮아 극히 혹독한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전쟁터에서 죽거나 노동에 동원되거나 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175쪽)
清水書院	1996년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①일본에 연행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위안부로서 의사에 반하여 전쟁터로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189쪽) 주)1945년에는 재일조선인 수가 그때까지 이주에 왔던 사람들과 합해 조선인구의 1할에 이르는 2백 수십만 명이 달했다.
	2001년	전시하의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하고 탄갱・광산 등에서 일하게 하였다. 패전까지 일본에 끌

		려온 조선인은 약 80만에 달하였다. 중국인도 4만 명 가까이 강제연행하였다. 조선인과 중국인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또한, 전쟁터의 비인도적인 위안시설에는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과 대만 등의 여성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조선과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시행하여 전쟁터에 동원하였다. 이런 중에는 전후에 전범이 되어 처형된 사람들도 있었다. (189-191쪽)
日本文教出版社	1996년	전시상황인 일본에서는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41년 무렵부터 약 80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을 강제로 일본으로 연행하여 탄갱 광산 등에서 일을 시켰다. 또한 중국인도 4만 명 가까이 강제 연행하였다. 조선인과 중국인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1945년 아끼다현, 하나오까 광산에서 극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한 중국인이 봉기했다가 진압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조선과 대만 등지의 여성 중에는 전쟁터의 위안시설에서 일을 하게 된 자도 있었다. 또 일본의 병력부족에 처하여 조선과 대만사람들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실시하여 전쟁터로 동원했다. 전후에 전범이 되어 처형당한 사람도 있다.. .. 전쟁에 동원된 조선, 대만 등지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252쪽)
	2001년	이 전쟁을 일본은 구미의 식민지로부터 아시아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동아전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을 노동자로서 징발하였다.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으로부터 약 70만, 중국으로부터 약 4만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와서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되었다.(209쪽)
扶桑社	2001년	대동아 전쟁의 전황이 악화되자 국내의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징용이 이루어지고, 또한 중학 3학년 이상의 생도·학생은 근로동원, 미혼여성은 여자정신대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생 및 고등전문학교생은 징병유예가 취소되고, 유감이었으나 조국을 생각하며 출정했다. 이와 같은 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행해져, 조선이나 대만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조선인이나 점령하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끌려가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노동해야만 했다. 한 조선이나 대만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화되고,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283-284쪽)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소요되는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인적동원이 강요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탄광·군수공장·일선기지로 징용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여 일본에 연행된 수만 하더라도 70만을 넘었다. 심지어 처녀들이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동원되어 일선에서 위안부 노릇을 하도록 강요되기도 하였다. 또 군대에도 동원되었다.

분석대상 8종 교과서들은 전쟁동원실정에 대하여 모두 서술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빈약하고 평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징병과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서술하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한 숫자도 밝히지 않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일본의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으로 여겨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교과서들이 종군위안부의 실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한줄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아예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문교 출판은 “여성 중에는 전쟁터의 위안시설에서 일을 하게 된 자도 있었다" 라고 단순하게 서술함으로써 종군위안부의 폐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다. 이는 종군위안부의 죄악성을 은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또한 후소샤등 일부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세월은 흘렀으나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에 대한 서술이 바르지 못함은 아직도 상처받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은폐, 왜곡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잔학성을 잘 드러내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 교과서 서술에서 나타난 한국 상

앞서 논하였던 것은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관련 부분의 서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교과서 서술 즉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에 나타난 한국사 서술에 대한 특징과 한국에 대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사에서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근대 이후 일본과의 최초의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임은 8종의 교과서들이 모두 공감하며 서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침략과정을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 아닌 한국의 책임으로 돌려세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마치 침략에 대한 책임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전 단계에서의 정한론과 관련한 서술상의 특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한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어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한론이 한국 침략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전적으로 국내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측이 개방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이 시대적인 조류를 탄 당위적인 것처럼 서술함으로 침략사를 미화시키는 측면이 은연중에 엿보인다.

갑오농민전쟁 즉 동학농민운동을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봉건 반외세의 자주적인 농민전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한국의 내정 문제에서 불거져 나온 단순한 반란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결국 일본의 침략성을 흐리게 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외세 그중에서도 일본이라는 것을 배제시킨 왜곡된 서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의의를 우리식대로 그대로 기술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침략사에 대한 서술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권침탈 관련 서술에서는 민족의 저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상세한 서술을 함에 있어서 많은 진일보를 이뤘다 생각되어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식민지 지배의 참상 그리고 일본의 잔학성을 많이 은폐하고 축소한 것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인다. 외세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미약하게나마 빠짐없이 기술하고 용어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동학농민반란을 갑오농민운동으로 3 · 1독립운동의 설명에서 폭동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사라졌다. 어떤 측면에서는 관동대지진에 있어서 한국인 학살의 참상이 한국 국사 교과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황민화 정책과 종군위안부 서술에 있어서도 국사 교과서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들은 한국 국정교과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듯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 교과서 서술의 왜곡 ·은폐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일례로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의 침략 이전의 한국사에 대한 자주적인 측면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자적인 하나의 국가로서의 언급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단순하게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아닌 지배 피지배의 관계로만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한 민족의 자주적인 측면이 완전히 무시가 되었으며 발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근대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들 조차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끌려 다니고 지배당한 측면만을 조명하여 독자적인 민족으로 인식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둘째로 철저히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측면이다. 물론 자국의 교과서에 자국의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서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일본과 과거의 제국주의 치하의 일제를 똑같이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과거에 대한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있다면 과거 일제의 만행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작금의 교과서 서술은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한다고 하는 후손들의 행태로서 적절치 않은 것이다. 가령 정한론의 서술에 있어서도 정한론이 대두된 원인을 자국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대상이 된 조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교과서 서술과 강화도 조약의 상황도 그와 마찬가지로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 즉 모든 침략의 과정이 결국 조선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책임전가식의 서술을 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눈에 띤다는 것이다.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만 해도 그렇다. 몇 천명이 무고하게 살해되었음에도 그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과거 일제의 잔학성을 드러내고 반성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모습들이 보여 져야 된다고 본다.

셋째 침략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않고 축소 은폐하여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피해를 주는 입장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로 하는 인명 손실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3·1운동, 관동대지진 등) 또한 식민지 정책의 와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피해상황들도 축소 은폐한 것들이 매우 많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서술에 대한 지나친 불균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일본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다면 자신들의 독자적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할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어서의 역사 서술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침입자의 입장이고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일본은 침입자의 입장에서만 교과서를 서술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상대국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서술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학문적인 분야가 아닌 후세대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서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 후 세대들에게 인식되는 한국인은 유약하며 의존적이며 독자적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민족이라는 관념일 것이다.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서만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한국관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서술만 이뤄지더라도 편향적이고 왜곡된 한국관을 바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동북아의 동반자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후 세대들에게 가르쳐지는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서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의 교과서들은 어떠한가? 이러한 서술로 되어진 일본 역사교과서를 배울 경우(특히 근대사에 있어서) 엄연히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족이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타율적인 민족으로 비춰

질 것이고 한민족의 독자적인 모습보다는 이민족에게 그저 자주 얻어터지고 그저 그렇게 간신히 살아가는 부정적인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심각하다. 과거의 한국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없어져 버린 민족에 대한 서술이라면 모를까 현존하는 한 민족의 서술이 이렇게 이뤄져선 안 될 것이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세계사 적 측면에서의 한국에 대한 기술은 단순하게 보자면 내용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다. 그 내용이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이 아닌 객관적 서술이 이뤄져야 함이 옳다고 본다. 비단 이것은 일본만의 100%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한국의 국정교과서인 중·고등학교 국사, 그리고 근현대사 책의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나라 국사 교육의 부실함을 다른 민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일본과 달리 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하나만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국사 교과서는 더더욱 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이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서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인 또한 한국사를 독립하고 있던 다른 민족의 역사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 후에서야 비로소 올바르고 객관적인 서술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한・일 교과서 논쟁

5.1. 한국정부의 수정요구안과 일본 문부과학성의 답변 분석

한국정부는 2001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안에 그 검토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어 왔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로 나아가야 할 이웃국가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2001년)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중략.....그러나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의 한국 강점이나 식민지 지배 등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위의 규정이나 선언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과서는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197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청소년의 평화 이념 및 국민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1965),「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 실천 체계」(1995) 등에 나타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다.
>
> 더욱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거나,,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는 내용이 현행 교과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
> 결론적으로 최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일부에는 인류의 평화 공존이나 한국과의 우호 친선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인권 옹호, 생명에 대한 존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심어주고, 이웃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려는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정 과정을 통과한 일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근린 제국 조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교과서에 담겨있는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와 왜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24]

2001년에 교과서 내용 수정에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보낸 요구안은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후소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요구안과 기존의 7종 교과서 일부에 대한 것으로 내용이 대부분이 후소샤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 정부의 수정 요구안의 검토 기준으로서 국제화 시대의 역사 교과서를 보는 시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사실과 기술의 오류 여부

둘째, 해석과 설명의 왜곡 여부

셋째, 내용의 축소와 누락 여부

한국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데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새로 검정 신청을 한 교과서에 대한 검토는 기존에 사용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7종)가 담고 있는 보편적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삼았다.

둘째,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라는 점을 유념하였다.

셋째,검토의견을개진할경우에는한국과일본에서이루어진역사학계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25]

본 논문에서도 다룬바와 같이 한국 관련 내용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7종의 교과서에 후소샤 교과서 1종이 추가되었다. 수정 요구안도 마찬가지로 후소

24)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 요구 자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2001.pp1-2.
25) 前揭資料,p.2.

샤 교과서에 대한 내용 검토도 기존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담고 있는 보편적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삼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술 분석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듯이 기존의 7종 교과서는 왜곡 보다는 축소와 은폐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후소샤 역사 교과서는 사실에 대한 왜곡과 사실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하여 일본 문부성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일본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관련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에 대해"를 통하여 그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였다. 문부성의 답변 서두에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읽어보면 언뜻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비쳐진다. 또한 한국정부의 수정요구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반드시 오류라고 할 수 없는" 또는 "해석상의 문제" "학습지도요령 상 지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번 한국 정부로부터의 수정요구 내용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 ① 잘못된 사실의 기재
> ②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못된 해석에 입각하여 기술
> ③ 기술되지 않은 특정 사항에 대해 기술해야하는 사항 또는 기술이 미흡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문부 과학성으로서는 동 사항들에 대해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에 입각하여 검정 통과 교과서의 정정 대상이 될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①고대사와 관련된 두 곳 이외의 부분은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 등 우리나라 학계에서의 학설 상황으로 볼 때 반드시 오류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며, 또한 ②항에 대해서는 소위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정통과 교과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③항에 대해서도 검정제도상 중학교 단계에서 학습해야할 내용으로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의 수정요구는 현행 검정제도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검토 시에는 기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전문적인 학술서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하였음.[26]

문부과학성의 답변 내용 중 ③번 항목에서 학습지도요령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만을 가지고 수정요구에 응한다고 밝히고 현행 검정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차원에서 수정 요구한 내용을 선별하여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으로서 논쟁이 될 만한 애매한 상황은 피해갈 구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안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답변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보여 진다. 한국의 수정 요구안과 문부과학성의 답변 내용은 본 논문의 방향과 맞게 근대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중에서도 본 논문이 다룬 7개 사안에 맞추어 다음의 <표>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표-12>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안과 문부과학성 검토 결과 비교(후소샤판)

주제	교과서 내용	한국 정부 수정요구안	문부과학성 검토 결과
征韓論	○ 1873년,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 정한론이 터져 나왔다	○ 조선의 조약 체결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기술 -일본이 기존의 교린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기 때문임을 설명하지 않음	일본, 학계에서는 메이지 신정부와 조선의 교섭 결렬 이유는 신정부가 송부한 문서가 막부시대의 형식과 달라서 조선 측이 수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거부한 이유는 이미 기술되어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이고는) 자신이	○ 조선이 사이고를 살해할	일본 학계에서는, 사이고

26) "중학교 역사교과서 관련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에 대해". 2001.문부과학성,p.3.

	조선에 가서 살해당하면 그것을 명목으로 출병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다카모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 사절로서 조선으로 건너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 자체가 사이고 스스로의 생각을 나타낸 문맥 가운데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강화도사건	○ 일본 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하는 등 시위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	○ 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사실 등 도발의 주체, 목적, 경위, 은폐	이미 일본 군함이 「시위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또한 강화도 사건의 목적 등에 관하여 제도상 기술하도록 요구 할 수 없음.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 동학의 난(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농민폭동…동학당은 서양의 기독교(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를 믿는 집단	○ 반봉건, 반외세 운동을 '동학의 난' 이나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며, 농민운동을 종교집단운동으로 한정한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음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은 외국세력 및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농민운동으로 보고 있으나, 지도자가 동학관계자라는 점 등에서 동학당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음. 또한 동 운동은 「농민운동」, 「반란」, 「반항」, 「혁명적 폭동」, 「민란」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되고 있는 부분도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수도 한성에 육박	○ '한성에 육박한 것'이 아니라 전주성을 점령했을 뿐	농민군은 각지에서 정부군을 무찌르고 전라도 수도 전주를 해방하고, 청・일 전쟁 개전 후에는 충청도 수도 공주에서 정부군과 싸웠다는 상황도 근거로 하면 한성을

			「위협하는 기세를 보였다」는 표현은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일본도 갑신사변 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일청양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	○ 일본이 청일전쟁 유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파병한 사실을 은폐하고, 청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등조치인 것처럼 서술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출병과 청국군과의 개전에 대하여, 계획적 파병이었다는 설과, 그렇지 않았다는 설이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사실관계만의 기술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한국병합	○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 한국 병합 과정에서의 침략 행위와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기술	일본 학계에서는, 영일동맹, 미국과의 각서, 포츠머스 조약 등에 의해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또한 검정의견에 따라 한국병합에 대해 「한국내 반대를 무력을 배경으로 억압하여 병합을 단행했다」고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의병 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한국 내 저항과 반발을 축소하면서, 극소수 친일파의 목소리를 고의로 부각 기술	자체 정정 신청 중(7.2)
관동대지진	○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 관헌(군경)에 의한 살해사실 은폐 - 살해 대상도 조선인이 대부분(약7000명)이었음에도 불구, ,사회주의자, 조선인, 중국인' 식으로 병렬,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조선인 피해 축소 기술	일본학계에서는 관동대지진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운동가 등이 주민 등으로 조직된 자경단 및 관헌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음. 특정 역사 사실을 어떻게 기술하는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일어났다.		만큼,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기술은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황민화 정책	○ 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시행되어…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화	○ 황민화 정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조선에서의 수탈상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을 일본 국민의 일부로 간주하여 일본 식민 정책의 본질을 은폐	이미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육・창씨개명 및 아시아제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신사참배의 강요 등의 황민화 정책이 기술되어 있고, 또한 토지조사사업 및 징용・징병・소위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음. 그 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제도상 추가 기술을 요구할 수 없음.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 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 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위안부」에 대해서 제도상 기술을 요구할 수는 없음.

후소샤 판 역사교과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안과 일본 문부과학성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정한론에 관한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 학계에서는”이란 단어의 반복 사용이다. 한나라의 교과서라는 것이 자국의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국과의 긴밀한 역사의식의 공유아래 보편타당한 학설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자국의 학계에서 인정하는 내용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서술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후 검토 결과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부분에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은 원천적으로 사안 자체에 대한 재고의 여지조차 없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서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동학농민운동 부분에서 일본 측 답변을 보자면 전라도 수도 전주, 충청도 수도 공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한국의 지리적 여건상황을 일본의 영토 개념에 그대로 대입시킨 말맞추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일전쟁 관련 답변에서는 일본 학계에서 계획적 파병과 그렇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설에 무게를 두고 있음에도 양자택일하여 어떠한 학설을 취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다. 일청전쟁 시 일본의 계획적인 파병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사실로 인정되고 있고 기존의 7종에서도 대부분이 계획적인 파병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애매하게 두 가지 학설론을 주장하는 것은 관련 사실을 애매하게 기술함으로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안은 조선인 학살 사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술을 요구하는바 대부분의 희생자가 조선인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집필자의 기술 방법의 차이로 받아들임으로서 한국 측과 근본적으로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황민화 정책과 군대위안부에 대한 답변 또한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수정 요구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이다.

<표-13> 한국 정부의 수정요구안과 문부과학성 검토 결과 비교(기존7종)

주제/ 출판사	교과서 내용	한국정부 수정 요구안	문부과학성 검토 결과
征韓論 (동경서적, 교육출판,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 일본 정부는 조선에 국교를 열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이 응하지 않아 국내에 정한론이 일어났다	○ 조선의 거부가 기존의 선린 외교 관계를 무시한 채 국교회복을 강요하는 일본측의 태도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지 않고, 정한론의 발생 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명치 신정부와 조선과의 교섭 결렬의 이유는 신정부가 송부한 문서가 막부시대의 형식과 상이했기 때문에 조선 측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또 일본 측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기술되어 있음
	○ 중국의 속국으로 위치 지워져 있던 조선은…일본과의 국교도 거절했다	○ 당시 조공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당시 조선이 중국과 책봉·조공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음.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제도상 조공관계 설명을 기술하도록 요구 할 수 없음
강화도 사건 (제국서원, 교육출판)	○ 일본의 군대가 강화도에서 포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조선의 포격을 유도한 일본측의 저의를 은폐하고 강화도 사건의 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수정요구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에 관한 기술이 불충분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에 의거, “무단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일본측의 示威행동이 포격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되어 있음.
	○ 청은 조선을 종속국으로 간주	○ ‘조일수호조규’의 ‘조선은 독립국’ 조항은 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설명하	제도상, 日朝修好條規 조항의 배경 및 의도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지 않음	함
동학농민운동 (대판서적, 청수서원)	○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큰 반란을 일으켜	○ 농민의 저항을 '반란'으로 표현, '항쟁'이나 '농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농민전쟁」, 「반란」, 「반항」, 「혁명적 폭동」, 「민란」등,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련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일본은 조선 지배를 계기로 삼아 중국으로의 진출	○ '조선지배'라는 표현은 일본이 당시 조선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본문의 기술 내용은 "일본은 조선을 지배할 계기를 포착, 결국은 중국으로의 진출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또한, 다음 절인 "한국병합과 조선 사람들"에서 한국의 식민지화와 일본의 지배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때,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청의 출병을 알게 된 일본은 군대를 보내…전쟁을 시작하였다.	○ 왜군파병을 청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응조치로 기술하여 일본의 계획적 파병을 은폐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출병과 청나라 군과의 개전에 대해, 계획적인 파병이었다고 보는 학설과, 이를 부인하는 학설등이 존재함. 이와 같은 학설 상황에 비추어, 사실관계만을 기술한 것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한국병합 (일본문교출판)	○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며, 식민지로서 지배했다.	○ 한국강제병합의 원인을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계획성을 은폐	수정요구의 대상이 된 기술에 대해, 「伊藤博文암살이 한국병합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에 의거, "이에"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듯한 문언이 삭제됨으로써,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이 이루어졌음.
황민화 정책 (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 지원한 조선의 젊은이들(사진 설명), 조선에서는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 지원병 제도의 강제성을 은폐하고, 조선인의 자발적 전쟁 참여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	사진과 같은 페이지의 본문에서는 “지원병 제도를 실시,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했다.”라고 이미 기술됨.
	○ ‘천황의 백성’에 걸 맞는 황국신민이 되도록 동화를 강요당했다.	○ 황민화 정책의 구체적 기술 미흡, 신사참배 일본어 교육 강요 등 구체적 내용 기술 필요	동 페이지에는 이미 “식민지인 대만이나 조선에서는, 병사의 모집이 시작되어, 宮城 및 신사를 향해 절을 하도록 한다든지, 고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었다. (창씨개명)라는 식으로 황민화 정책의 구체적인 기술이 있음. 또한 이미 한국병합 부분에서 사진과 함께 ” 일본어를 강제하고, 민족의 자각을 없앰으로써 일본에 동화시키려 했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 이미 이상과 같은 기술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술할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어, 제도상 더 이상의 기술을 요구할 수는 없음.
군대위안부・강제징용 (동경서적, 대판서적,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 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 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위안부」에 대해서 제도상 기술을 요구할 수는 없음.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기존의 7종 역시 후소샤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수정 요구안은 주로 사실과 다른 왜곡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기존의 7종은 용어상의 문제점, 축소나 은폐 문제를 주로 요구하였다. 모든 교과서는 아니지만 일부 교과서가 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누락한 점은 후소샤와 동일한 내용이며 문부과학성의 답변 역시 동일하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일본의 교과서 내용의 분석에 앞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과서 발행제도의 특징과 발행체제 및 검정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교육목표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사 과목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성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새 문화 창조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두고 있는데 비해 일본 역사교과서는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생각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한국의 국사 교과서가 1종의 국정교과서로만 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은 검인정체제라서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따라서 집필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집필자 마음대로 교과서를 서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제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문부성 관리나 집권세력이 황국사관, 식민주의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이 현존하고 있음으로 교과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심대하다. 서론에서 검토했던 것과 같이 일본에서는 1886년 처음 교과서 검정제도를 실시한 이후 1948년부터 현행의 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인의 한국사 인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식민주의 사관으로 식민 지배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으로 대표되는 이 역사관은 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하였지만 이러한 식민주의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문부성과 집권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

27) 심연숙,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 연구: 근대사를 중심으로"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000), p.57-58.

한국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내용면에서 이전의 교과서 (1996년 교과서 검정 이전) 보다 충실해졌고 서술상의 내용도 세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외세에 대한 저항, 식민통치의 참상과 식민지화 과정에서의 불평등한 조약 그리고 식민지 정책과 황국식민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교과서 내용도 눈에 띈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땐 예전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일본의 강제징용과 징병의 구체적인 서술과 종군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축소 왜곡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해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870년의 정한론은 1871년 廢藩治縣을 계기로 메이지 정부가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족들의 불만으로 반란의 가능성이 있게 되자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쿠라 사절단의 반대로 정한파가 패배하게 되자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서 살펴본 정한론은 조선에 의해서가 아닌 명백히 일본 내부의 권력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며 이러한 일본의 계획이 당시의 서양 열강들의 패권주의와 맞물려 현실화가 된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에서 검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한론이 제기된 것이 일정부분 조선에게 있다는 식의 서술을 함으로 한국침략의 의도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은 지우기가 힘들다. 이는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져 조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부 교과서의 서술에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은 모든 교과서가 인정하고 있듯이, 이는 긍정적인 서술의 한 측면으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교과서에 비해 분명히 근대사 서술은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의도된 침략과정, 피해상황, 한국인의 저항, 식민지 정책, 황국신민화 등의 정책이 강제성을 띄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이다. 하지만 왜곡사적인 측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축소은폐의 서술방식은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에 있어서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 (관동대지진, 황

국신민화 정책)에 있어서는 서술내용이 아예 없거나 너무 간단하게 집필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일부 교과서에 있어서는 용어상의 문제가 눈에 띈다. 예를 들면 3 · 1 운동을 반란이나 데모, 한국을 內地로 표기한 것도 식민주의 용어로서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2001년도 한국 정부의 수정 요구안과 일본 문부과학성의 답변 내용을 비교 검토해보았지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편성에 의거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주로 일본 학계의 입장만을 반영함으로서 객관성을 많이 상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과연 일본이 동북아의 평화 공존과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이 있는가가 의심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인 문제들은 심각하다고 까지는 볼 수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점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근대사의 서술 내용을 놓고만 봤을 때도 아직은 내용 서술의 관점이 과거의 일제와 현재의 일본이 나뉘어져 쓰여야 함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제와 지금의 일본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침략자로서의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은 지금의 현실에서 자랑스레 논하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암울하고 어두웠던 결코 오래 되지 않은 과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교과서의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두웠던 측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난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이 옳을 것이다. 앞서 논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집필진이 아직 황국사관,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 세대에 의한 후 세대의 역사 서술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가오는 시대는 세계화 시대로서 결코 과거의 문제를 덮어두고 축소, 왜곡, 은폐한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화 시대에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더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고로 일본이 비록 경제적으로 세계 일류 국가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역사 해석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편파적일 때에는 역사적으로 후진 국가에 머물고 말 것이다. 역사는 거울이다. 과거의 역사에 충실하지 못할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추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과서는 후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띤 교과서는 타국과의 우호 협력과 공존공영이 밑받침 되어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교과서 서술에도 중국의 교과서 서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식의 한국사 서술은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서 논하였던 것과 같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지배-피지배의 입장으로 보고 서술하는 것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1945년 해방(일본의 입장에서는 패전)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한국을 피지배의 대상으로서 간주하고 역사 서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대사의 역사 서술의 많은 부분들이 진일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껄끄러운 점들이 잔존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한 민족으로서 한국을 인정하고 근대사뿐만 아니라 고대사에서부터 주체적인 한국사를 서술한다면 진정한 우호협력, 공존공영의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만 서로 뗄 수 없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사의 비중을 늘려야 함이 옳다고 본다. 짧은 분량의 서술에서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역사의 진정성을 찾기가 힘들다. 한국과 일본의 장구한 세월의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사에 대한 비중과 분량을 늘려야 함이 옳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역사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를 덮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처럼 그것을 파헤치는 것만이 또한 능사는 아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역사는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므로 서로의 우호관계와 밝은 부분의 서술을 함으로 불행한 과거사를 지양하고 올바른 미래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원하다면 민간차원의 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양 국가가 서로를 인정해야 올바른 역사 교과서 서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편찬한 후소샤 역사교과서는 이러한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일부 집권세력의 문제이며, 일부 독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전 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임이 현실화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을 의식해 교과서 출판사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일본의 극우세력은 우려를 뛰어넘어 위협으로 다가온다. 어쩌면 일본의 과거역사에 대한 진솔하고 냉철한 인식에 의한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과서 편찬은 요원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 염원조차 우리가 품지 말란 법은 없다. 일본의 바른 인식을 가진 양심적인 학자들과 다수의 일반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웃국가들과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한다면 올바른 역사관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基本資料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교학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교학사,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두산동아,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천재교육,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법문사,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주),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대한교과서(주),2002.

西尾幹二 外 13名,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

阪士順夫 外 2名, 『새로운 사회』,東京書籍, 1997.

http://www.je-kaleidoscope.jp/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2-48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 1983~2001』,2002.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2-35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2002.

單行本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2001.『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2002.『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 역사비평사.

한일관계사학회,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2』,자작나무, 1998.

타와라 요시후미(저),『철저검증 위험한 교과서』,역사넷.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역. 2001

장용걸, 『정한론과 조선인식』, 보고사, 2004.

이현희, 『정한론의 배경과 영향』, 한국학술정보, 2006.

최문형,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2004.

이원순,정재정 편저,『일본역사교과서무엇이문제인가』,동방미디어, 2002.

강만길 외, 『우리의 역사를 의심한다』, 서해문집, 2003.

홍윤기, 『일본의 역사 왜곡』, 학민사, 2001.

김성보,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김성보, 한일관계사학회 편,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근현대)』,경인문화사, 2006.

學位論文 및 學術紙

김주영, 「일본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근대시기 한국사 왜곡에 대한 일고찰 -후소샤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대구카톨릭대학교교육대학원,2002.

김지혜, 「한. 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 일 관계사 서술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2005.

신주백,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한국근현대사 연구 33,한국근현대사학회,

남시학, 「한. 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서술 분석」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2006.

최갑록,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송재홍, 「현행 한. 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충호,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송은설, 「일본역사교과서 한국사 관련 내용 분석」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김영숙, 「후소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의 실태와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심연숙,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 연구」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강창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무엇이 문제인가」,한국역사연구회, 2001.

윤혜정, 「일제 강점기에 대한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내용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이순남,「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2004.

권오현,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후소샤(扶桑社)판 공민교과서의 분석」학술논문,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2001.

정재정, 「일본 역사교육의 현황과 전망」학술논문, 한국역사연구회,1992.

정재정, 「강화와 개혁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역사교육」학술논문, 한국역사연구회,1996.

정영순,「한・일간 역사왜곡 갈등과 유럽에서의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학술논문, 사회과 교육, 2004. 제43권 2호.

이순남,「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2004.

정재정,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한국사 관련 서술의 변화」학술논문, 서울시립대학교,2001.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日語敎育	학 번	2006804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윤 수 일 한문: 尹 洙 日 영문: Yoon Su Il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신우아파트 8동 509호				
연락처	(062)364-2748, (010)6678-2748 E-MAIL: ysi1031@nate.com				
논문제목	한글 :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연구 - 한국 근대사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the History Textbooks in Japanese Middle School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2월 일

저작자 : 윤 수 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